20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 부문)

2025. 1.

방송통신위원회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o **(정부업무평가기준 반영)**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민생과제 중심 성과창출,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협업 강화 등 고려

o **(성과관리 강화)** 정책부서 및 지원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선정·관리하여 상위목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o **(환류 실효성 확보)** 주요정책 관련 과제수행,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실적 등 자체평가시 가점 반영

- 정책(환경)·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 부서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정책개선 및 조직·인사 운영 등에 반영

o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각 분야 전문가로 자체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24.9월)하고, 과제 특성별 3개 소위원회(방송·통신·행정)를 조직

- 소위원회별 정책설명회를 개최('24.12월)하여 자체평가위원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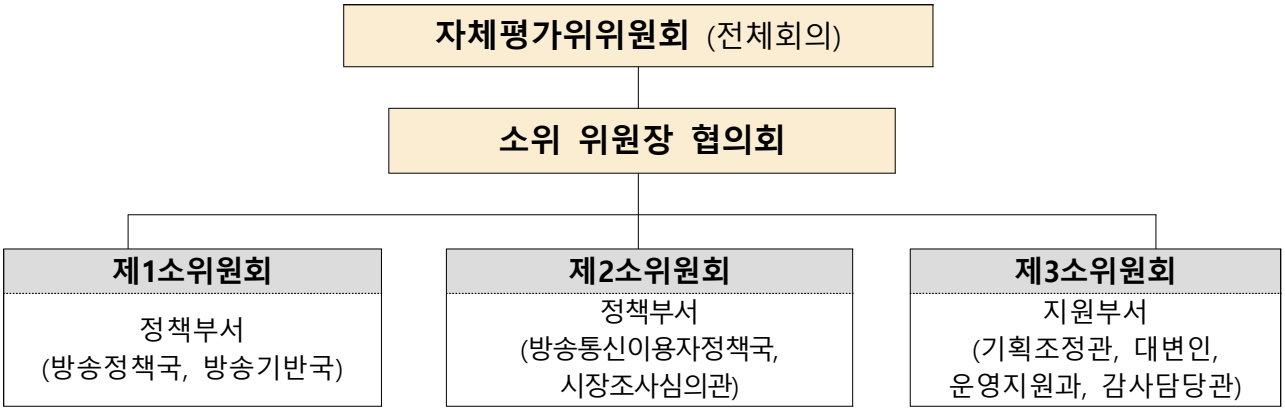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o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 분야 2개 소위원회(방송·통신), 행정관리분야 1개 소위 등 3개의 소위원회로 구성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도 >



o **자체평가위원회 기능 및 역할**

-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및 자체평가 시행계획 심의·의결

-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등

□ 평가방법

o **방법**: 자체평가위원회 평가는 평가대상 과제(정책·지원부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실시

o **절차**: 정책부문(1·2소위)과 지원부문(3소위)을 나누어 평가하고, 소위원장 회의를 통해 평가등급 및 순위 조정

< 자체평가 절차 >

소위원회(위원)	⇨	소위원회	⇨	소위원장회의	⇨	전체위원회의
관리과제별 실적보고서 평가		관리과제별 순위 확정		정책만족도 반영 등급 확정		심의·확정

- **(소위원회)** 자체평가위원 대상으로 관리과제 추진부서가 추진실적 등을 설명한 후 논의를 통해 소위원회별 '평가순위' 확정

- **(소위원장 회의)** 정책부서* 18개 과제에 정책 만족도 점수를 반영한 최종 '등급 및 순위'를 확정

* 방송정책국, 방송기반국,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시장조사심의관

< 평가등급 범위 >

순위 누적	등급	정책부서(18개 과제)	지원부서(9개 과제)
~ 상위 5%이내	1등급 (매우 우수)	1개 과제	1개 과제
5%초과 ~ 20%이내	2등급 (우수)	2개 과제	1개 과제
20%초과 ~ 35%이내	3등급 (다소 우수)	3개 과제	1개 과제
35%초과 ~ 65%이내	4등급 (보통)	5개 과제	2개 과제
65%초과 ~ 80%이내	5등급 (다소 미흡)	3개 과제	2개 과제
80%초과 ~ 95%이내	6등급 (미흡)	3개 과제	1개 과제
95%초과 ~	7등급 (부진)	1개 과제	1개 과제

- **(이의신청·확인절차)** 자체평가에 대한 수용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체평가등급(안)을 담당과에 통보하여 이의신청 절차 진행

- **(전체회의)**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평가결과 심의·확정

< 자체평가 추진일정 >

일 정	주요내용	비 고
'24.12.24., 12.26.	소위별 평가	과제수행 부서의 추진실적 설명 및 평가
'24.12.30.	소위원장 회의	평가 순위 및 등급 결정
'24.12.31.	목표달성도 반영	12월말 기준
'25.1.2.~1.10.	자체평가등급(안) 통보	자체평가등급(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25.1.21.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24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심의·의결
'25.2.7.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국무조정실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o 평가대상 : 정책부문 18개, 지원부문 9개 등 총 27개 과제

o 평가지표 : 4개 평가항목, 9개 평가지표(지원부서는 8개 평가지표) 구성

< '23년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지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5/15)	① 계획수립의 충실성	5	8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	15	7
2.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25)	① 추진일정의 충실성	5	5
	②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 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5
	③ 현장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5	5
3. 성과 달성도 (34/40)	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20
	② 성과지표의 적극성	17	20
4. 정책 효과성 (26/20)	①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9	20
	②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 정책성과 만족도 조사는 정책부서에 한함	7	-
가점	국정과제·주요정책 수행(+1), 정부업무 평가결과(+1),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1),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실적(통합재정사업평가 포함)(+1)	+4	

< '24년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정책	지원
1. 계획 수립의 적절성 (15/15)	① 계획수립의 충실성	5	8
	②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7
2.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25)	① 추진일정의 충실성	5	5
	②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 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	15	15
	③ 현장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5	5
3. 성과 달성도 (34/40)	①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20
	② 성과지표의 적극성	17	20
4. 정책 효과성 (26/20)	①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19	20
	②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 ※ 정책성과 만족도 조사는 정책부서에 한함	7	-
가점	국정과제·주요정책 수행(+1), 정부업무평가 결과(+1), 사회적가치 실현 성과(+1), 평가결과 후속조치 이행 및 미흡사항 개선 실적(통합재정 사업평가 포함)(+1), 협업과제 수행(+1), 민생과제 수행(+1) ※ 가점 항목 2개 추가	+6	

2. 평가결과

(1) 총 평

□ '24년도 총 26개 과(팀)의 27개 관리과제(정책부서 18개, 지원부서 9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o 정책부서는 매우우수 1개(5.5%), 우수 2개(11%), 다소우수 3개(17%), 보통 5개(28%), 다소미흡 3개(17%), 미흡 3개(17%), 부진 1개(5.5%) 과제

- 우수 이상 과제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등이며, 미흡 이하 과제는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등인 것으로 평가

○ 지원부서는 매우우수 1개(11%), 우수 1개(11%), 다소우수 1개(11%), 보통 2개(22%), 다소미흡 1개(22%), 미흡 1개(11%), 부진 1개(11%) 과제

- 우수등급 이상 과제는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등이며, 미흡등급 이하 과제는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등으로 평가

< 평정등급 분포기준 >

등급	정책부서(18개 과제)	지원부서(9개 과제)
1등급 (매우우수)	1개 과제	1개 과제
2등급 (우수)	2개 과제	1개 과제
3등급 (다소우수)	3개 과제	1개 과제
4등급 (보통)	5개 과제	2개 과제
5등급 (다소미흡)	3개 과제	2개 과제
6등급 (미흡)	3개 과제	1개 과제
7등급 (부진)	1개 과제	1개 과제

□ 총 27개 관리과제의 48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9%**로,

※ (산정방식) 100% 이상 달성 성과지표(40개) / 전체 성과지표(45개) x 100

- 성과지표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간주, 성과계획상 3개의 성과지표*는 '24.2월 중 산출 예정으로 달성률 산정에서 우선 제외

* 1)장애인방송 편성분량, 2)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만족도, 3)스팸 수신량

- 4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 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미달성

* 1)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적책무 제고율, 2)방송프로그램 품격 향상도, 3)규제정비과제 이행률, 4)연가사용 활성화, 5)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달성률 >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성과목표 달성률	97.4%	86%	89%
총성과지표 개수	39개	43개	48개
총성과관리 과제수	24개	25개	27개

- 성과목표 미달성은 방송통신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한 적시 업무추진 어려움 등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지표명	목표 (A)	실적 (B)	달성도 (B/A)	미달성 원인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①재승인조건 이행률(50%) ②공익채널 선정 업무추진율(30%) ③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율(20%)	96.7%	50%	52%	- 방통위 미구성으로 인해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의결 지연(②번) - 방통위 미구성으로 중계유선방송사 재허가 사전동의 1건에 대해 사전동의 여부 의결 지연(③번) ※ 재승인시 종편·보도PP에 부과한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14개)는 모두 이행(①번)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66.6점	64.2점	96.4%	- 방송심의 규제업무 특성상 국민의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어 '프로그램 품질저하 방지 기여도', '규정위반 프로그램 제재수준 적절성' 등 항목 점수가 다소 하락
규게정비과제 이행률	100%	0%	0%	- 규제정비계획 정비를 위해 의견수렴 등을 완료하였으나, 방통위 미구성으로 인한 정부입법 일정 순연 불가피
연가사용활성화	15일	14.9일	99.3%	- '24년도 예상치 못한 인사청문회, 국회 일정 등이 다수 발생하여 연가사용이 목표치 대비 다소 부족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79점	76.2점	96.5%	- 방통위 미구성으로 인한 주요정책 추진 지연 등에 따른 대국민 만족도 점수가 다소 하락 (대언론 만족도는 전년대비 유사 수준)

(2) 주요성과

□ **정책부서**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등 **3개 과제**는 **우수(1~2등급)**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❶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Ⅱ-1-②) (1등급)

【 주요 성과 】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규범 마련

○ AI 서비스의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칭)「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포털뉴스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 포털-언론사간 뉴스제휴 심사평가 신뢰성 제고 및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투명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포털뉴스 민관협의체 개최(12월), 네이버 현장방문(9월), 포털뉴스 세미나 개최(12월) 등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율규제

○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산하 4개 실무분과 설치, 방통위는 '소비자·이용자 분과' 지원 업무를 공정위와 공동 수행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6.28. 국회 제출)

□ 공정한 망 이용환경 구축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5~9월)

※ 주요 CP·CDN 17개사 대상, 가이드라인 상 의무규정 및 불공정행위 금지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 달성 원인 】

○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책네크워크*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

*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출범(7.19.),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개최(9.30.)

○ 언론사 제휴 및 검색결과 노출 알고리즘 등의 신뢰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견수렴시 사업자, 학계 등의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권익을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업과 이용자 중심의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글로벌사업자와 국내사업자간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행실태 점검시 대상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조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

❷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Ⅲ-1-②) (2등급)

【 주요 성과 】

□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ㅇ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한 패쇄자막 조정 등 특화기능이 탑재된 맞춤형TV 보급('23년 2만대→ `24년 3.2만대)

ㅇ KBS 등 6개 채널 및 SKB 등 3개 플랫폼에 대해 수어영상 위치·크기 조정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농아인 방송시청환경 개선

ㅇ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자막·수어변환 시스템 고도화 및 앱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ㅇ 59개 방송사업자에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제작비 지원(46억원)

ㅇ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작지원 확대('23년 8개사→'24년 10개사)

ㅇ EBS 교육방송물을 장애인방송으로 재제작·보급(4,000여편)

ㅇ 발달장애인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지원(총 50여편)

□ 동행하는 미디어 환경 기반 마련

ㅇ 장애인방송 제작기반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업 확대

※ 비수도권 5개지역 센터(부산·광주·강원·대구·경남) 대상 장애인방송 인력양성프로그램 시범운영

ㅇ장애인 방송 관련 캠페인 영상 제작 및 송출(유튜브 조회수 103여회, TV공익광고 송출 등)

【 달성 원인 】

□ 시각·청각장애인 방송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맞춤형 TV를 확대보급하여, 전체 시각·청각장애인 중 45%에게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지역 장애인방송 제작기반 활성화 등으로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에 대해 적극적 노력

❸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Ⅰ-1-②) (2등급)

【 주요 성과 】

□ 상설 미디어 교육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12개) 및 나눔버스(8대) 배치 등을 통해 미디어 이해·활용을 위한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실시

○ 유아·청소년·청장년 등 생애주기별 필요역량에 따른 커리큘럼 개발 및 장애인·고령자 등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제공

□ 미디어 인프라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시청자미디어센터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시설·장비를 탑재한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확대('23년 483회→'24년 850회)

○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을 설계 및 구축하고, 자체 통합 플랫폼 구축

○ 미디어교육 효과성 조사, 강사 양성·연수 등 전문성 강화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된 주제로 다양한 축제 및 지역민 중심의 행사 개최

※ 장애인미디어 축제(부산, 6월), 청소년 미디어제작 경진대회(대전, 8월), 미디어교육 우수사례공모전(10월)

【 달성 원인 】

□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강화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및 정책상황을 반영, 전 국민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 대상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부처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수립('24.3.28.)

○ 소외계층·지역 대상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미디온 운영을 통해 미디어교육 접근성 개선

- (온·온프라인 교육 제공)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제공

○ 빠르게 일상화 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AI, 빅데이터, 가상공간 등)에 대한 교육 확대 및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급증에 따라 교재개발 및 강사 특별 연수, 학교대상 딥페이크 범죄예방 교육 실시로 안전한 미디어 환경 조성

(3) 개선·보완 사항

□ 정책부문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과제, 지원부문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과제는 미흡(7등급)한 것으로 평가

○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변화하는 방송시장 환경하에서 이용자 이익 증진 및 보호 관련 성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방송시장 여건 및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하여 업무 노력도 및 적극성을 강화할 필요

○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규제정비과제 이행률' 등 이행실적이 계획 대비 미흡하며, 규제혁신 업무의 고유한 기능을 강화할 필요

- 향후 위원회 구성 완료를 통해 규제정비과제 이행 등 주요업무가 정상추진될 것으로 전망, 규제혁신 기능을 대표하는 성과지표 마련 계획

○ 미흡과제는 미흡원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5년도 성과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관리·점검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 정책부문(18개 과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1등급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2등급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3등급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4등급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 행위 근절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5등급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및 온라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6등급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7등급

□ 지원부문(9개 과제)

관리과제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1등급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2등급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3등급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4등급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5등급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공직기강 확립 철저	6등급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7등급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Ⅰ	**주요정책 성과관리과제(정책부서)**

1.	융합 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제도 기반 마련	3등급

□ 주요성과

o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3법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국회 입법에 적극 대응(재의부결, '24.9월)하고, 해외사례 및 역대 발의 법안 비교·분석 정책연구 등 추진('24.6~12월)

o **(공영방송 관련 제도개선)** 공영방송이 민영방송과 차별화된 공적책무(공공·공정·투명성 등)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평가체계, 지배구조 개선 등) 추진

o **(수신료 분리징수 본격 시행)**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이행을 위해 KBS·한전 간 협의('23.7~'24.6월) 지원 및 구체적 분리징수 본격 시행('24.7월~)

※ 분리징수 본격시행('24.7월) 이후, 수신료 환불 민원(KBS) 38,270건(12.2억원) 처리('24.11월 기준)

o **(수신료 재원 투명성 강화)** 수신료 면제 등 제도정비 방안과 수신료와 광고 등 다른 수익의 회계처리 구분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24.6~12월)

o **(특별재난지역민 지원)** 특별재난지역* 대상 TV수신료 납부면제로 해당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검토

* '24년 7·9월 집중호우(충북 옥천군 등 38곳, 23개 지자체) 지역 대상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소유겸영 규제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후 조속히 개정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 관련 통계현황 및 국내외 사례, 연구결과 등을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 성과지표의 세부 산출내역이 본 과제의 목표에 부합하는 내역들로 구성되어 있는 등 성과지표로서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됨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 성과관리시행계획 시 수립한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각종 제도개선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업한 실적이 다수 확인되며, 정책연구반 운영을 통해 연구기관·학계 등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함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국민 불편 해소 및 제도 합리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 도입 및 소유·겸영 규제 개선안 마련 등을 추진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6	33	■ 미디어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		■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다양한 이해관계, 미디어 경쟁 심화, 기존 제도의 한계 등 복합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	21.12	■ 수신료 분리징수 도입 및 협약제도 도입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및 공영방송의 공적역할을 강화 ■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및 성장기반 마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12		
계			92.12	
가점			2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4.12	

2.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2등급

□ 주요성과

o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유아·어린이·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춘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맞춤형 미디어 이론·체험교육 실시

- 국민 생애주기별 미디어교육 운영(유아 50개 기관, 청소년 253개교, 청장년 44개 대학 연계)으로 교육 참여인원* 지속 확대

* 미디어교육 참여인원 : ('22년) 42만 명→('23년) 43.3만 명→('24년) 45.7만 명

o **(디지털 격차없는 평생교육)** 디지털 환경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사회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미디어 교육 제공('24년 126개 기관)

o **(미디어 인프라 확대)** 시청자미디어센터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시설·장비를 탑재한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 확대, 미디어교육 정보 및 강좌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o **(미디어 전문성 강화)** 미디어교육 효과성 조사, 강사 양성·연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연구 등 미디어교육의 전문성 강화 추진

o **(미디어 참여행사 개최)**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전·페스티벌 개최

* 장애인 미디어 축제(6월), 청소년 미디어 제작경진대회(8월),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10월)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유아,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교육 제공을 위해 관련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고도화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5	■ 미디어교육 관련 연구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미디어교육 현황 및 제언 등을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		■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향상도와 이용자 만족도는 미디어교육의 질적성과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복합지표임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8개 추진일정을 충실히 준수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 대학생 홍보기자단을 선발하여 미디어교육 및 행사 등 기획 및 운영, 미디어교육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 ■ 미디어교육 수강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전 국민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부처합동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수립 ■ 생성형AI, 딥페이크 역기능 증가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미디어교육 교육 실시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2	■ 미디어교육의 질 제고노력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		■ 센터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 산출한계에 도달하여 지표의 조사대상, 문항, 만족도 산출 모형 등 조사 고도화로 목표 재조정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향상도는 전년도 조사결과(6.18%)보다 5% 상향된 목표치를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9	24.58	■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확대, 체계화로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미디어 복지 향상 및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58		
계			94.58	
가점			2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6.58	

3.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4등급

□ 주요성과

o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지역기반 우수 프로그램 제작지원 확대,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 등 콘텐츠 경쟁력 향상 및 다양성 확보

- 지역밀착형(정규, 시사보도) 분야, 경쟁력 강화(정규, 특집, 파일럿) 분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모바일 등 신유형 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20개 방송사 40개 프로그램 선정·지원, 36억원)

- 방송환경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공동제작, AI 활용 등 19회), 전문가 컨설팅(4K 카메라 활용 등 29회) 지원

o **(콘텐츠 유통체계 강화)** 해외 콘텐츠 마켓, 피칭포럼 참가 및 우수 콘텐츠 재제작 지원 등을 통한 콘텐츠 홍보 및 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

- 해외 콘텐츠마켓 참가(베트남 Telefilm(6월), 싱가포르 ATF(12월)), 지역방송 교류협력 행사(11월) 개최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등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확대 지원

- 우수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 등을 위한 번역, 더빙, 자막, 재편집 등의 재제작 지원(10개사 15개 프로그램)

o **(신규 미디어 대응 강화)** 지역방송 콘텐츠를 국내 OTT 플랫폼인 왓챠(137개), 웨이브(35개), 네이버TV(5개), LG U+ FAST 채널(12월 협약)을 통해 제공하여 지역방송 콘텐츠의 시청자 접점 확대 및 신규 수익 구조 마련 기회 지원

※ 왓챠(137개), 웨이브(35개), 네이버TV(5개)를 통한 지역방송 콘텐츠 서비스 중

o **(지역방송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를 담은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마련('24.1월 수립)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콘텐츠 제작·유통 체계 강화 및 재직자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노력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 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 자료, 지역·중소방송 대상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결과를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 '시청·청취자 만족도', '콘텐츠마켓 출품 프로그램 수' 등 지역방송의 지속적인 발전과 자생기반 마련 유도를 위한 성과지표로 적절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3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콘텐츠 공동제작 가점 강화, 지역방송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FAST 채널 등 유통구조 확대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노력함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6	30	■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절히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		■ 만족도는 매년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타겟 시청층 변화 등에 따른 목표치 실현 어려움에도 도전적으로 설정 ■ 출품 수는 최근 3개년 마켓 출품 평균 증가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	21.3	■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유통활성화 지원, OTT 등 지역방송 시청기반 확대,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 유통실적 확대 등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30		
계			88.3	
가점			2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0.3	

4.	정확·신속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4등급

□ 주요성과

o **(재난방송 종합상황실 운영)** 재난방송 의무방송사(50개)에 국민행동요령 및 재난상황을 사전에 알리도록 재난방송 협조를 요청(89회)하고 재난방송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재난방송 미실시 건수 감소(8회→3회)

o **(재난방송 통보문 개선 추진)** 재난방송 요청 시 국민들의 가독성 향상(방송문안 250자 이내) 및 재난 취약계층 정보 제공 강화(영문 방송문안 제공)를 위해 '24년 상반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의결(7.12.) 및 관계부처와 안건협의

o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21.3분기~'23.4분기 중 재난방송 법규위반 방송사업자(14개사, 24건) 대상 과태료 총 1억 6,500만원 부과

o **(KBS 재난방송 운영지원)** 수어방송 제작 지원,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방송시스템 GIS 연계 등 예산 지원(2,119백만원 지원)

o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강화)** 전국 중요 방송시설의 방송재난 예방 및 방송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 확대(36개 방송사)

o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 방송재난 예방 및 재난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방송사별 「'25년 방송재난관리계획」과 방통위 「'25년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고 '24년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12월)

o **(재난방송 음영지역 수신환경 개선)** 터널·지하 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의 수신환경 실태조사(5,405개 터널) 및 시설관리기관 대상 기술지원(51개 터널)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60대)(1,000백만원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콘텐츠 제작 시 시청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및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 개발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3	■ 방송사의 재난방송 실시를 보장하고 KBS의 재난방송 서비스 제공, 방송시설 안전점검 및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이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충실히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 재난콘텐츠 제작 개수,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횟수와 같은 정량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표 구성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일정을 충실히 준수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각종 재난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신속하게 제공하고 관련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업무협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 ■ 재난방송 통보문 개선을 위해 '24년 상반기 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 의결(7.12.)하고 관계부처와 안건협의 등 협업 노력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지상파·종편/보도PP 외에도 지역지상파방송사(26개) 대상 특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지역별 재난 상황에 지역방송사 방송시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6	31	■ 성과지표의 목표를 적절히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5		■ 재난유형별 행동요령 콘텐츠 제작 건수를 성과지표로 신설, 국민들의 콘텐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일상화된 재난에 따라 전년실적 대비 적극적으로 성과지표 목표치(1%p상향)를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5	20.61	■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의 철저한 운영으로 빠짐없는 재난방송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 ■ 재난방송 관련 수어방송 제작지원, 수어방송 의무 법률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접근권 강화 ■ 터널·지하 공간 등 재난방송 수신 음영지역의 수신환경 실태조사 및 시설관리기관 대상 기술지원을 통해 재난방송 수신 환경 개선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61		
계			87.61	
가점			2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			89.61	

5.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6등급

□ 주요성과

o 지상파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요구 증대를 반영한 재허가 제도개선 추진

- **(저출생·지역소멸 해소)**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심사항목의 세부평가방법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 추가 반영('24.6.월)

- **(시청자의견 청취 강화)**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를 실시('24.11.27.)하여 청년세대가 바라는 방송정책 방향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 강화

o 지상파방송사 대상으로 부가된 (재)허가 조건에 대한 '23년도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허가조건 이행점검)** 지상파방송사별 (재)허가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하여('24.3~10월) 사업자의 이행 독려, 이행률 약 97.7%(635건 중 621건) 달성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24년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신청서 접수·기술심사 의뢰·시청자의견 청취·현장점검 등을 진행하였으나, 위원회 미구성 상황으로 인해 심의·의결 등 관련절차 미진행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위원회 정상화 시 조속히 재허가 심사 및 심의·의결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2	■ 재허가 제도개선을 위해 개선 필요사항을 재허가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반영하는 등 충실하게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이행현황은 '재허가' 심사를 통해 평가받고, 공적책무 관련 재허가 조건이 부가되는 점을 반영, 동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 지표로 적절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2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 재허가시 시청자 의견청취,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등을 통해 시청자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 ■ 청년의 목소리를 방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청자의견 청취 강화 ■ 재허가 대상 사업자 설명회를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부터 현장의 의견 청취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요구와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한 지상파 재허가 제도개선 실시 ■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및 부관사항 부과 최소화 관련 외부지적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6	29	■ 성과지표의 목표를 적절히 달성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방송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담보 등을 위해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고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4	18.92	■ 재허가 심사 제도개선으로 심사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 ■ 재허가 조건에 대한 정기적이고 엄격한 점검 등으로 방송사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부득이 재허가가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방통위 주도의 적극적 성과창출 노력 필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4.92		
계			81.92	
가점			2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83.92	

6.	종편·보도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5등급

□ 주요성과

o **(재승인 심사)** ‘24년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보도PP 3개사(채널A·YTN·연합뉴스TV)를 대상으로 재승인 의결(’24.3.27.)

o **(이행실적 점검)** 직전 종편·보도PP(6개사) 재승인 시 부과한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3년 이행실적 점검 실시(‘24.5~10월)

o **(재승인 제도 개선)** 방송사 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기존 5년→확대 7년)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o **(공익채널 심사 및 제도 개선)** ’25~’26년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인)정을 위해 심사를 추진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시 개정 추진

o **(사전동의)** 과기부가 중계유선방송사(신안유선방송) 1개사의 재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9월)함에 따라 사전동의 여부 검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방통위 미구성으로 위원회 보고·의결사항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 재승인조건 이행점검 결과 위원회 보고 및 후속조치 등이 추진되지 못함

- 이에 따라, 관련 성과지표 목표달성도가 미흡(달성률 50%)하였고,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을 당초 계획대로 완료하지 못함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성과지표 달성률 제고)** 방통위 미구성으로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공익채널 선정 추진, 유료방송 사전동의 처리가 지연되어 성과지표 목표달성도가 낮은 상황으로, 위원회 구성후 지연과제 즉시 추진 필요

o **(성과지표 개선)** 성과지표가 추성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달성가능하되 보다 적극적인 지표 설정이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3	■ 종편·보도PP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면서 사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 성과지표가 다소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 정책내용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며 적극적인 성과지표 추가검토 필요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2	■ 12개 추진계획 대비 8개 완료 ※ 방통위 미구성으로 4개 과제는 진행 중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재승인 이행실적 관련 현장 점검 시 전문가가 포함된 점검단 운영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 공익채널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자 고충 및 제도 관련 의견 수렴, 관련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고시 개정(안) 마련 ■ 허가·승인 제도 개선 관련 방송사 의견수렴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종편·보도PP 재승인 제도 개선 추진으로 방송사 경쟁력 제고 및 미디어산업 활성화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8	■ 방통위 위원회 미구성으로 의결이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성과지표 달성률이 부진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 (재승인) 전년도 실적 및 관련 재승인 조건에 대한 엄격한 이행점검 등 실적 하향 요인을 고려, 목표치 설정 ■ (공익채널)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 관련 심사위 운영·선정 여부를 목표치로 설정 ■ (사전동의) 과기부에서 요청하는 사전동의에 대한 심사 및 사전동의 여부 통보 완료를 목표치로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	20.86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계획 관련 방송사의 자체적인 이행 유도 ■ 종편PP에 대한 콘텐츠 투자 관련 조건 부과로 방송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콘텐츠 투자로 유도 ■ 종편·보도PP의 재승인 유효기간 확대 추진으로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4.86		
계			83.86	
가점			1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			84.86	

7.	건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환경 조성	4등급

□ 주요성과

o 방송심의 등 규정 위반 제재조치 처분 및 행정소송 대응, 심의규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심의규정(53건)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30건)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
- 제재조치 처분에 대해 사업자가 불복하는 경우 재심 처리(방통위 서면의결, 30건), 방송사업자가 제기하는 제재 처분 취소소송(집행정지 30건, 본안 30건)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기일 참석 등 대응
- 방심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등 방심위 거버넌스 관련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검토(7건), 방송심의 대상에서 '공정성' 제외 등 방송법 개정안 검토(2건), 방심위 관련 청문회 등 과방위·법사위 대응
- '23년도 방통위의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에 따라, 방심위에 '비상임위원 대외 직무활동비' 관련 사항을 시정하도록 방심위에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과(1.19.)

o 2024 파리올림픽 중계방송의 과도한 중복중계로 인한 시청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중계방송사(KBS·MBC·SBS)에 순차편성 권고(7.1.)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통해 권고방안 논의(5.30.), 지상파3사 스포츠 국장 의견수렴(6.20) 등을 통해 권고(안)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의결(6.25.)

o 방송제작진 대상 아동·청소년 가이드라인 정기교육, 권익보호 전담 부서 지정 의무 부과 등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2.14.)

o 방송대상 심사에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한 국민·청년심사단 확대, 공동체 가치를 제고한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희망나눔상' 신설·시상 등「202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식 개최(11.11.)

o 지상파, 종편·보도PP 등 주요 방송사와 협약을 통해 연 2회 언어순화 자막 고지를 추진하여 방송언어 사용 환경 개선(상·하반기 16,982회 송출)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국민관심행사에 '패럴림픽'을 추가하도록 하는 고시 개선방안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3	■ 대외평가 및 기존 평가결과를 충실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하였음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 방송품질 개선 노력, 심의활동, 민원 대응성 등 다양한 측면의 정책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입체적 지표 구성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파리올림픽 순차편성 권고 관련 관계부처 및 방송사 등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노력함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방송심의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30건)에 따라 집행정지 및 본안소송 대응, 동일 심의규정 반복 위반 방송사에 대한 모니터링 등 상황변화에 적절히 조치함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9	■ 방송심의 관련 민원처리 만족도는 높으나, '방송프로그램 품격향상도'의 목표치 대비 96.4%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		■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함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5	20.28	■ 올림픽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를 통해 보편적시청권 보장, 방송대상 심사에 국민·청년심사단을 운영하여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28		
계			85.28	
가점			3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			88.28	

8.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2등급

□ 주요성과

o 시각·청각장애인 방송 시청 편의 증진을 위해 폐쇄자막 조정 등 특화기능이 탑재된 맞춤형 TV 확대 보급('23년 2만대 → '24년 3.2만대)

- TV 사용자 이용 실태 좌담회 및 장애인단체·유관기관 전문가·제조사 대상 성능개선 의견을 바탕으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기능* 탑재

  * ('24년 신규 탑재 기능) 색각 이상자를 위한 화면 적·녹·청색상 필터 설정

o 실시간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작비를 지원('24년 46억원)하여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 보장

  * 장애인방송 필수지정사업자(지상파, 종편, 보도PP) 47개, 고시의무사업자(일반PP, SO) 12개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방송물(4,000여편)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콘텐츠(50여편) 제작·보급

o 비실시간 온라인 콘텐츠 위주로 미디어 이용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제작을 지원하고 대상 방송사업자 지속 확대

  ※ ('23년) KBS·MBC·SBS·EBS·JTBC·TV조선·채널A·MBN (8개사) → ('24년) YTN·연합뉴스 추가 (10개사)

o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자막-수어 변환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실수요자 대상 시범서비스 운영(7~12월) 등 인터넷 미디어 접근성 제고

o 수어영상의 위치·크기 조정 등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를 지원하여,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방송 시청 편의 제고(9개사)

  ※ 채널(6개) : KBS·MBC·SBS·YTN·JTBC·TV조선, 플랫폼(3개) : SKB·LG헬로비전·Skylife

o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및 장애인방송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보급물량 확대에 따라 대상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5	■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 추진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		■ 시각·청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성과물로 성과지표 설정이 적절함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장애인단체·방송사업자·학계·전문가 및 관련 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장애인방송 VOD 서비스 지원 방송사업자를 확대, 장애인의 비실시간 방송 미디어 접근 개선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5	32	■ 장애인방송 편성분량의 목표치 달성 예정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		■ 수요자(시각·청각장애인)와 공급자(장애인방송 제공 사업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 적극 추진하였음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9	24.69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실시간·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확대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69		
계			95.69	
가점			1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			96.69	

9.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6등급

□ 주요성과

o 장르간 혼합, 유통 경로 다원화 등 미디어 환경에 맞춰 오락물 및 1개국 수입물 상한 폐지,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 완화 등 주요 편성규제의 폐지·완화를 위한「방송법」개정 추진

* 지역MBC(20→14%), 지역민방(3.2→2.6%)의 의무편성비율 2년간('24.7.~'26.6.) 완화 우선 시행('24.7.3.,「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개정)

o 방송사-외주사 간 계약된 외주제작 프로그램 대상「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점검(상·하반기) 및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 실시(문체부 공동)

- 표준계약서 활용,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및 활용, 상생협의체 운영 실적 등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결과 향상 ※ 점검결과 : ('21) 95.7점 → ('22) 96.7점 → ('23) 98.2점

o 국내 OTT 사업자와 국내·외 미디어 업계, 학계 간 네트워크 구축과 OTT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OTT 포럼 개최(10.31.) 및 해외 OTT 시장과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보고서 발간(12.27.)

o 등록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및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평가에 10개 채널을 확대 평가하는 평가틀을 마련하고 첫 시행

o 매체별 형평성 제고와 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방송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송평가 제도개선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방송평가 제도개선을 위한「방송평가규칙」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위원회 보고 및 의결이 불가하여 제도개선 시행 지연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	11	■ 방송프로그램 편성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정책 실효성을 진단, 주요 편성 이슈 발굴 결과를 편성규제 개선에 활용 ■ 외주제작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및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실시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 외주제작거래 이행점검을 통해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신규 성과지표 개발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19	■ 국제 OTT포럼 개최, 해외 OTT 조사 보고서 등 정상 추진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		■ 합리적인 편성규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유관기관장 간담회, 문체부 협의 등 실시 ■ '외주제작거래 실태조사'를 문체부와 공동 추진 ■ 공적채널 콘텐츠 평가 및 방송평가 개선 관련 방송사업자, 방송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등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		■ 순수외주제작 편성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외주제작사협회·문체부와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한시적 완화 우선 시행 ■ 외주 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점검방식 개선 ■ 공적채널 평가에 부합하도록 제작역량평가 위원회 위원, 전문가, 사업자 의견을 청취하여 신규 항목 발굴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8	■ 성과지표의 목표를 적절히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 최근 3개년간 표준계약서 활용률을 고려한 신규지표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4	19.15	■ 낡은 편성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외법·규제 등 정보제공으로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 방송평가 제도개선 실적이 전년도 대비 다소 부진,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을 반영한 적극적 제도개선 필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15		
계			77.15	
가점			2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79.15	

10.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5등급

□ 주요성과

o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지원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정부 평가 '우수*' 등 사업효과 입증을 토대로 '24년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에 따라 실시한 '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사업으로 평가받음(15개 부처, 169개 사업)

※ '24년 예산 직전년도 대비 40.3% 증액('23년 37.2억원→'24년 52.2억원), 지원기업 43.3% 증가('23년 224사 → '24년 321사 계획)

- 혁신형 중소기업(총64개사, TV48, 라디오16사), 소상공인(총 257사)에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 판로개척·자생력 확보→ 지역경제·방송광고시장 활성화

o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방송 법령 개정(안) 마련 추진

※ 이해관계자(한국방송학회, 시민단체 등, '24.3~4월, 5회)와 관련 부처(문체부, 식약처)의견 수렴('24.5~10월, 4회) 및 정책연구('24.6월~)를 통해 시청자 보호방안을 포함한 방안 강구

o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확보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으로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고시」 개정안 마련

※ '24년 연내 고시가 여의치 않은 사항임을 고려하여 기존 고시('23년) 잠정 적용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방송광고 규제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지속 및 상황 해소 시 입법 절차를 조속 추진할 예정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 현장의견 및 사업효과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획을 적절히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 방송광고 제도개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과 관련하여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2개 지표로 구성한 것은 적절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 성과관리계획서상 9개 추진계획 대비 8개 완료, 1개 정상 추진('25.2.완료예정)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사업설명회, 지원기업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제공,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 홍보 협업, 홍보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게시 등 실시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광고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 및 결합판매 제도개선 추진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28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마케팅 여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통해 성과지표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도전적 목표 설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을 통한 만족도 예측이 어려움에도 유사지표의 초기 목표치를 고려한 목표를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5	20.21	■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추진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 및 고용 증가, 청년지원정책 반영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 방송광고 재도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21		
계			85.21	
가점			1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			86.21	

11.	디지털서비스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1등급

□ 주요성과

o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 AI 서비스의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 공감대 형성

* (가칭)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o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 민간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뉴스 서비스 등 정보제공 과정에서 언론사 제휴 및 검색결과 노출 알고리즘 등의 신뢰성·투명성 확보 방안 논의

o 공정한 망이용 환경 조성

- 주요 ISP 3사 및 CP·CDN 17개사 대상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24.5월~9월)

※ 가이드라인 상의 의무규정(서면계약, 필수내용 등),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우월적 지위남용,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준수 여부 등 점검

o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자율규제

-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기구 산하 4개 실무분과 설치, 방통위는 '소비자·이용자 분과' 지원 업무를 공정위와 공동 수행

※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6.28. 국회 제출)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인공지능기술기반 서비스의 확산에 대비하여,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 및 글로벌 규제현황에 대한 동향 파악 필요

o 민간 포털플랫폼 사업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및 상생 협력방안 지속적 논의 필요

o 인터넷망 이용에 공정성을 확보하여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의견수렴 추진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5	■ 국정과제, 업무보고, 국내현안 등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추진계획을 수립함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		■ 국정목표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함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고려하여 추진일정을 적절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현장방문, 민관협의회, 세미나 등을 구성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으며,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진행됨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인공지능기술 등 디지털신기술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적절히 대응함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2	■ 추진중인 과제 등이 일부 있으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되며, 완료된 과제의 성과가 유의미함을 고려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		■ 난이도가 높은 제도개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성과지표의 적극성이 높음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9	24.33	■ 생성형 AI로부터 이용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신규예산을 확보하여 정책효과 발생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33		
계			94.33	
가점			3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민생과제 수행
합계			97.33	

12.	통신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상 피해구제 지원 강화	5등급

□ 주요성과

o **(통신분쟁조정 활성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3.7월 시행)에 따라 비상임 위원 6인을 추가 위촉('24.2월)하고 직권조정결정제도를 도입·실시('24.1월~)하는 등 통신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 분쟁조정(23년 1,259건 → 24년 1,533건) 및 조정상담(23년 9,678건 → 24년 9,038건)을 활성화하여 통신 분야 국민 불편을 최일선에서 해소
(분쟁 해결률 : 24년 목표 66.8%, 실적 73.6% 초과 달성)

o **(통신분쟁 피해예방 및 이용자 보호 협력 강화)** 서비스별·유형별 분쟁조정결과분석·발표('24.1월),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24.2월), 통신분쟁조정 빈발사례 분석·발표('24.8월) 등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 안내

- 통신사업자 현장 간담회 개최('24.9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합동 세미나 개최('24.11월) 등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o **(온라인피해365센터 기능 확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피해지원을 위해 신속·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24년 누적 3,856건, 총 누적 6,307건)

※ '23년 상담실적 1,390건 대비 3,856건**(113% 증가)**

- 365센터-국민콜110 상담연계('24.9월), AI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개설('24.12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협력('24.9월) 등 이용자보호에 선제적 대응

o **(온라인피해 예방 강화)** 온라인서비스피해지원협의회 운영('24.3월, 8월), 상담처리현황 발표 및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 발간(24.1월),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24.4월) 등 이용자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 안내

※ '24년 상반기 우수 홍보사례(사칭 관련 피해주의보), 하반기 우수 홍보사례 선정(국민콜110상담연계), '24년 행안부 이달의 추천공공서비스 선정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성과목표 달성의 적극성 부족**) 추진업무 내용이 단편적인 측면이 있으며, '통신분쟁 해결률'보다는 실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적 대안에 대한 고민은 미흡

o (**분쟁조정 제도 한계**) 휴대폰 판매 사기, 스미싱 등 불법 사항을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 제도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

※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므로 통신사업자에게 조정안 수락을 강제할 수 없음

o (**온라인피해 365센터 설치근거 미비**) 법적 설치근거가 없어 온라인 피해 법률지원, 피해정보 삭제지원, 신유형 피해 대응 등에 한계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이용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실질적 체감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검토, 분쟁조정위원회 효율화,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강화 등 업무 다변화 필요

- (성과지표 개선) 타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 해결률 현황 등을 분석하여 성과지표 개선 등 통신분쟁 조정의 실효적 대안 마련

- (분쟁조정 신속성 제고) 급증하는 분쟁조정 신청건수에 비해 분쟁조정위 인력이 부족하여 법정기한 내 분쟁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상임위원을 위촉·운영하는 등 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제고 필요

-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강화) 고령층 및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신분쟁 조정 제도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3	■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및 분쟁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민불편 해소 및 편익을 제고 ■ 온라인피해365센터 법·제도 개선 연구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 국민들의 통신분쟁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해결률'을 성과지표로 선정 ■ '해결률'보다는 실제 개선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검토 필요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2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통신분쟁 관련 사업자 간담회 개최, 방통위·개인정보위 합동세미나 개최 등 협업 노력 ■ 통신·온라인피해 민생점검, 권익위 국민콜 110 상담 연계, 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협력 강화 등 현장의견 적극 수렴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빈발성 통신분쟁 피해 예방을 위해 사례 분석,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 마련 ■ AI관련 피해 등 신유형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전담신고창구 설립·운영
성과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6	29	■ 성과지표의 목표를 적절히 달성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분쟁 해결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매년 목표치를 0.3% 상향 ■ 신유형·사각지대 등 온라인피해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로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성과지표임에도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적극 도입
정책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5	20.55	■ 통신분쟁조정 신청 증가, 통신분쟁 해결률 초과 달성 등 정책 효과 ■ 통합적·전문적인 온라인 피해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피해구제에 기여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55		
계			84.55	
가점			1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85.55	

13.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기반 조성 및 위치정보의 안정성·활용 강화	3등급

□ 주요성과

o **(스팸 대응체계 개선)** 불법스팸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24.1월), 대량문자의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자율 인증제**' 시행('24.6월)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문자재판매사(1,100여개)의 대량문자 발송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전송자격인증 발급

- 악성문자에 대한 노출 최소화를 위해, 국내 휴대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개발·제공('24.9월~)

* KISA에 신고·접수된 스팸 신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악성 스팸문자 여부를 판단하여 필터링

- 과징금 등 불법스팸 관련 법적제재 강화,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체계 고도화, 민·관 스팸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24.11월)

*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경찰청

o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업무 등 자율적인 개선 유도를 위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실시(5.22.)

※ 이동통신, 앱마켓, SNS 등 13개 분야 46개 서비스(중복제외 33개사) 대상 평가

o **(플랫폼 장애 대응 강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 2.14.~3.25./자체 규제심사: 4.15.(심사결과: 원안동의)/규개위 규제심사: 12.16.(심사결과: 비중요규제)

o **(맞춤형 이용자 교육)** '찾아가는 방송통신서비스 교실' 및 온라인 교육 운영(목표인원 35,410명 대비 54,083명 실시, 52.7% 초과달성), 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재 제작·보급

※ 노년층·농어민용 큰글씨 교재, 다문화가정용 다국어(한·영·중·베·태·캄·러) 교재, 시각장애인용 점자 교재(45,700부) 및 리플렛(150,000부), 전자책·PPT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o **(통신서비스 피해예방·정보제공)** 통신서비스 활용·피해예방 콘텐츠,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 등 정보 제공(연중) 및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피싱·스미싱 등 통신금융사기 주의 문자 발송(총 2회)

o **(본인확인제도 개선 및 운영)** 임시허가로 제공된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4.1월)

- 14세 미만 아동 온라인 아이핀 절차 개선('24.10월), 재외국민 비대면 본인확인 수단 마련('24.11월) 등 디지털 이용 취약 계층의 본인확인서비스 개선

o **(디지털윤리 교육·인식제고 확산)** 다양한 교육콘텐츠(30종)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이를 활용한 전 국민 대상 디지털윤리 교육(목표인원 195,000명 대비 252,902만명 실시, 29.7% 초과 달성) 실시

- 능동적인 참여형 교육 (골든벨 퀴즈, 가족 캠프(4회), 직장인 교육(181회) 등) 및 대국민 캠페인 실시·홍보(공모전(6~10월), 디지털윤리대전(12.27.) 등)하여 디지털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윤리 인식 제고

o **(위치정보 산업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 우수 사업모델 발굴 및 각 사업화 단계별(아이디어→시장진입→사업확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7~12월)하고, 산업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법」 개정안 마련(12월)

-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법률 준수 여부 실태점검(4~12월, 1,200여개사) 및 보호조치 교육(8회) 실시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 및 평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통·폐합, 평가방법 개선 등 필요

o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위치정보법」개정안 입법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 이용자의 안전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충실히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지표로 적절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전략적 협업과제를 위해 개인정보위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 불법스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각적인 협업 ■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사업자 및 평가위원 등 의견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을 제고해 나가는 등 적절히 대응 ■ 통신시장 변화를 반영한 피해 예방 교육 콘텐츠 마련 및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지표 개선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1	■ 주요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가능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		■ 성과지표의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스팸수신, 위치정보, 인터넷 윤리 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함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7	22.45	■ 스팸 대응체계, 본인확인서비스 개선 및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강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에 기여함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45		
계			90.45	
가점			3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협업과제 수행
합계			93.45	

14.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4등급

□ 주요성과

o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교화된 허위조작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자율규제 기반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권고(안) 마련 및 AI 생성물 표시제 의무화 추진

- 국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판별 교육 및 강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총121회, 수료인원 2,747명)

o **(불법정보 유통방지)** 국외에서 접속하는 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DN 사업자의 세부조치사항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마약·도박·자살유발 등 불법정보에 대한 범정부 대응으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o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점검, 투명성보고서 검증·공개(90개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 민관협의체 운영 및 디지털성범죄물 대리 신고·삭제 요청기관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o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정보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프로그램 개발·보급(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사이버 안심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텔레그램 신규지정),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여부 점검(이통3사 및 알뜰폰37사 대상)

o **(권리침해 및 디지털폭력 방지)**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피해상담·구제지원 및 예방활동 강화 등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디지털폭력 문제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사이버렉카 등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의적 활동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국정과제를 반영한 주요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대응(계속)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4	■ 웹하드 불법 음란물 유통량 조사,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사전조사 등 통계분석 및 사전조사 충실히 수행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9		■ 불법촬영물등 기술적·관리적 조치개선율과 유통방지 기술 성능평가 수행률 및 팩트체크 교육 수료율 등 주요과제에 대한 대표성 있는 지표 설정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허위조작정보 범부처 TF, 마약·도박·저작권·불법사금융 등 관계기관 각종 협의체 참여,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강화를 위한 범정부 TF,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협의회 참여 등 협업에 적극 노력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강화, 저작권 침해사이트 대응,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5	31	■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적절히 달성함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6		■ 웹하드 불법음란정보 기술적조치 개선율은 전년대비 8% 이상 상향하는 등 성과지표를 적극성으로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6	21.28	■ 불법음란·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시행 점검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물 확산 방지 ■ 청소년보호책임자 확대, 청소년보호SW 개선·보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기여 ■ 팩트체크 역량강화교육 확대 등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기반 강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28		
계			89.28	
가점			3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			92.28	

15.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3등급

□ 주요성과

o **(조사종합계획 수립)** 시장조사심의관 조직 신설('23.11.)을 계기로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통신·방송 분야별 조사·점검 계획 수립('24.7월)

o **(해외사업자 집행력 강화)** 해외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사 및 제재 단계별 개선 방안 마련('24.4월)

- 조사·제재 단계별 문제점 및 해외·타부처 규제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현장조사·자료제출 실효성, 국내대리인 제도 등 개선

o **(방송통신 사후규제 정비)** 디지털 플랫폼·통신·방송시장 변화에 따른 체계적·효율적인 규제정책 추진을 위한 정비방안 마련('24.10월)

- 방송통신 사후규제 법제정비 연구반 운영을 통해 금지행위·사실조사·과징금 부과 등 사후규제 체계 및 절차 정비방안 도출

- 연구반 운영 결과,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 및 맞춤형 사후 규제를 위한 금지행위 전면 개편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

o **(방송통신시장 규제 동향 분석)** 디지털 플랫폼, 생성형 AI 등 신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피해 신속 규제를 위한 동향 분석

- 국내외 플랫폼 규제 동향 파악을 위해 정책연구과제를 실시하고, 주요 국가별 플랫폼 규제 현황과 관련 조사 사례 등 분석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방송통신시장 규제 정비 및 조사 효율화 추진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5	■ 해외의 규제체계 정비, 조사·제재, 배상판결 등 관련 규제동향 분석을 통해 적절한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10		■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통신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피해·불편 등 규제 정비 필요 ■ 규제 정비과정에서 필요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연구과제 추진 등 지표 설정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방통위-과기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처간 방송통신정책 관련 이견사항 조정 등 부처간 협업 노력 ■ 사후규제 법제정비 연구반 운영을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현장의견 반영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이용자 불편·피해 문제가 제기된 '아고다'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 실시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6	33	■ 사휴규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규제정비안 마련, 조사관 교육, 규제 동향분석 실시 등 성과목표를 적절히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7		■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자사우대, 다크패턴 등 이용자 기만 행위 등 기존에 없던 신기술 적용으로, 전혀 새로운 유형의 행위 발생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이 시급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8	23.30	■ 조사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방송통신분야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플랫폼서비스 관련 사후규제 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입법 등을 추진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30		
계			95.3	
가점			0	
합계			95.3	

16.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불공정행위 근절	4등급

□ 주요성과

o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및 전환지원금 도입, △집합건물 내 독점계약 금지 △사전승낙 제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 권익 증진

o **(유무선 통신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동통신시장 성지점 불법행위 및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신규 단말기 출시 전 이용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하여 이용자 피해를 방지

o **(통신시장의 이용자 피해행위 대한 집중 점검)** △결합상품 시장에서 허위·과장·기만 광고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불필요한 선탑재앱의 삭제 제한으로 인한 이용자의 권익 저해 여부 점검 △알뜰폰 본인확인 절차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필요)** 법 폐지 후 시장혼란 및 이용자 피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조치 추진, 시장 상황 모니터링 필요

-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	12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 통신시장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8		▪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파악 및 이용자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지표로 설정 ▪ 상시적 시장상황 대응을 위한 상시조사체계 운영 및 법·제도개선 추진실적을 지표로 설정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2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13개 추진계획 대비 12개 완료, 1개 진행중(1월 중 완료 예정)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전환지원금 활성화, 단통법 폐지 관련 의견 수렴 및 유통점·통신사 현장방문 실시 ▪ 제조사·이통사 임원 간담회, 유통협회 및 알뜰폰협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등 진행 ▪ 유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 단통법 폐지를 위해 과기부와 긴밀한 협력 추진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통신시장의 지원금 경쟁 활성화 및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전환지원금 도입 추진 ▪ 사전승낙제를 강화하는 개정법 시행 이전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 온라인 성지점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미게시 모니터링 실시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17)	16	30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율, 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건수 등을 반영한 성과목표를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		▪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허위과장광고 등 법 위반 행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율 반영 ▪ 통신시장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연간 4건의 제도 개선 건수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5	20.31	▪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의결 등 성과 창출 ▪ 번호이동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입부담을 일부 경감 ▪ 향후 단통법 폐지에 따른 유통구조 합리화에 대한 대책 등 적극 마련 필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31		
계			84.31	
가점			3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 민생과제 수행
합계			87.31	

17.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6등급

□ 주요성과

o **(트위치 사실조사)** 개인방송 플랫폼 사업자 트위치의 화질 저하 및 VOD 서비스 중단 관련 사실조사 종료 및 시정조치(안) 송부('24.2.6.)

o **(알리 익스프레스 사실조사)** 이커머스 사업자 알리 익스프레스의 유료 멤버십 관련 이용자 기만행위(다크패턴) 등에 대해 사실조사 진행('24.4.1. ~ 9.30.)

o **(앱 마켓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여부 조사)** 앱 마켓사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관련 구글·애플에 시정조치안 통보 및 사업자 제출의견 검토 중('23.12월~)

o **(네이버 뉴스서비스 관련 사실조사)** 네이버 뉴스서비스 및 알고리즘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 진행 중('23.10월~)

o **(OTT 요금변동 관련 사실조사)** 요금 변동이 발생한 주요 OTT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관련 사실조사 진행 중('24.3월~)

o **(앱마켓·인터넷플랫폼 실태조사)** 앱 마켓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 및 최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와 주요 인터넷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등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o **(플로팅광고 모니터링)**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불편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총 350개사)

o **(모바일 앱 마켓 결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앱 마켓 내 모바일 앱 대상 '앱 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 및 미준수 사항 개선요청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 적절성 미흡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지표 개선 검토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4	11	■ 사전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 등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 주요 업무추진(사실조사 등)을 위한 계획 및 기준을 사전적으로 제시할 필요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1	■ 성과관리계획 상 9개 추진계획 대비 7개 완료, 2개 정상 추진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앱 마켓사, 앱 개발사 현장방문, 면담실시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실시 ■ 네이버 뉴스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사실조사 관련 자료확인 및 언론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 앱마켓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부가통신실태조사 실시 등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업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		■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분석, 리포트 함으로써 부가통신사업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적기대응에 기여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6	30	■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절히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4		■ 부가통신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관련 주요 정책추진 내용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선 검토 필요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3	18.30	■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앱 마켓사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앱 마켓 금지행위 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앱 마켓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종 이용자의 권익 보호 기대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30		
계			80.3	
가점			1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			81.3	

18.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7등급

□ 주요성과

o **(이중납부 안내고지 강화)** 유료방송사, 유관협회, 민원개선 자문단 등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중요금 납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내고지 강화 개선

- 유료방송 단독상품 이용자 대상으로 타 사업자 서비스 전환 시, 직접 해지 신청 안내를 강화하도록 안내하여 이중요금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

o **(방송분쟁 조정)** 분쟁조정제도 운영을 통해 채널 재계약, 송출수수료 협상 등 갈등 상황 모니터링 및 당사자간 협상 중재·지원* 등으로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 사전 방지

- 위원 임기 만료 즉시 신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24.2.27.~'26.2.26., 제11기), 연속성 있는 분쟁조정 업무 수행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현대홈쇼핑-KT스카이라이프 간 송출수수료 분쟁('23.10월~'24.4월), SBS미디어넷-LG헬로비전 간 채널계약 분쟁('24.3월)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내부 의견 조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IPTV 사실조사 결과보고' 가 당초 계획(6월) 대비 지연 추진됨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IPTV법 금지행위 등 조사 및 결과보고)** IPTV사업자의 IPTV단독상품 가입 관련 온라인 가입절차 제한, 요금정보 비대칭 제공 행위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24.6월까지로 계획했으나

- 사실조사 결과자료에 대한 내부 검토회의('24.6.13)에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출자료 재검토 및 결과보고서 수정·보완*('24.7.~12월)

* 행위사실과 위법상 판단 부분 수정본 보고(12.26.) 이후 추가수정 중

※ 향후 업무일정에 따라 결과보고 및 위원회 심의·의결 추진 예정('25.1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5)	5	12	■ 사업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장상황 파악 및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2. 성과지표의 적절성(10)	7		■ 주요업무와 연계성 및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검토할 필요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0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일정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2		■ 유료방송 이용자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 유관협회, 민원개선 자문단 등 현장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협업 추진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방송시장 조사 정책 추진 시 외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
성과 달성도 (34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17)	14	27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개선인식도가 전년대비 상승하여 성과목표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17)	13		■ 열악한 방송시장 환경하에서도 피규제자인 방송사업자들의 시장 개선 인식을 반영하되, 최근 3개년 평균치를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정책 효과성 (26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19)	13	18.28	■ 방송분쟁조정 및 대가산정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이 적정 대가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내 방송콘텐츠의 품질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 ■ 변화하는 방송시장 환경하에서 이용자 이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 필요
	9. 정책성과에 대한 만족도(7)	5.28		
계			77.28	
가점			1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78.28	

Ⅱ 주요정책 성과관리과제(지원부서)

1.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5등급

□ 주요성과

o **(국정과제 추진)**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과관리 추진

※ 국정6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국정27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국정59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세상, 국정64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 차질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조실 주관 점검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출범 2주년 성과자료집을 통한 방통위 성과 홍보

o **(업무계획 수립)**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대응을 위해 '혁신 성장 기반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한 '24년 업무계획 발표

※ 3대 주요 과제 : ① 미디어의 공공성공익성 강화, ② 미디어 규제 개편을 통한 혁신 성장 지원, ③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성과지표를 국정과제 및 혁신과제의 이행 관련 과정으로 삼고 있어 실적에서 기획업무 고유의 성과가 드러나지 못함

- 다만, 기획부서 특성상 성과측정이 용이한 주요 업무들이 위원회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한 과제 설정 및 점검에 해당되어 환류·점검 외 성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점이 있음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상황의 지속적인 관리·점검 강화 및 체계적인 정책연구 수행 지원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7	13	▪ 전년도 업무성과 개선사항 검토 및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현황을 분석하여 계획 설정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6		▪ 방통위 국정과제 추진과 정부혁신 이행을 모두 반영, 과제의 성실한 추진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 ▪ 정책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 검토 필요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2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일정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국정과제·방통위 업무계획 추진을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범부처 TF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노력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		▪ 범부처 정책협의체에 참여하여 정책 추진을 위해 대응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미디어 개혁TF 운영 지원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7	35	▪ 국정과제와 혁신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 ▪ 기획업무 고유 기능이 강화된 정책 효과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목표 설정 필요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8		▪ 방통위 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의 지표임에도 100%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성과지표 설정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5	15	▪ 미디어 산업 및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통신비 경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 이용자 보호 및 국민권익 강화에 기여
계			85	
가점			0	
합계			85	

2.	행정데이터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4등급

□ 주요성과

o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역량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소속 직원들의 역량강화 방안 마련

- (역량진단실시) 데이터 활용역량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 **(기간)** '24. 6.24. ~ 7. 5.(2주간)
> ■ **(대상)** 방통위 본부 직원(138명)*
> * 정원 규모별(240명) 통계 표본 수(최소 인원수 산정방식)로 산정
> ■ **(방법)** 행안부「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 **(결과) 역량진단 총 점수 55점(2단계 발전기)**

o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제고)** '24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진단지표 중「데이터 오류율」 1등급(0.01%)을 달성

< '24년 DB 값진단 결과 >

DB명	진단건수	오류건수	오류율(%)	등급
방통위홈페이지	1,077,324	8	0.0007	1등급
통합업무포털	1,908,657	78	0.0041	1등급
온나라2.0	364,212,056	3,407	0.0009	1등급
기록관리시스템	528,530,654	2,530	0.0005	1등급

o **(비상대비 대응체계 강화)**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상황 비상대비 태세 구축 및 국가 위기관리 체계 확립

- **(국가중요시설 방호실태 점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방송사·송신소에 대한 방호실태 지도·점검

-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충무계획에 반영된 주요 조치사항 위주 실전연습을 통하여 중단없는 방송기능 유지 및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개선 보완·필요 사항

o 방통위 기관 '공공데이터베이스(DB) 표준' 마련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8	13	■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근거로 충실히 계획을 수립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성과로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 실무자 회의를 개최, 비상대비 계획 수립에 적절히 반영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5		■ 행안부 측정지표·검증기준에 따라 역량진단 실시 및 품질수준 평가를 수행 ■ 객관성이 담보된 측정지표를 성과지표로 사용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3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른 일정을 충실히 수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데이터관련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노력 적극 수행 ■ 상·하반기 담당자 워크숍을 통해 비상 대비 분야 성과제고를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기관의 데이터활용 역량진단 실시 및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 통합 민방위 훈련을 통해 전 직원의 비상사태 대응역량 강화 및 유관 기관과 연합 대응능력 제고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	18	35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수준,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제고 등 성과 목표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7		■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수준(55점이상) 지표에서 4% 이상 상향된 목표를 설정, 공공데이터 값진단 영역 품질수준 제고 지표에서 최고 수준(1등급: 0.01% 이하)을 목표치로 설정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9	19	■ 방송통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실행력 있는 충무계획 수립과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실시, 국가중요시설 방호태세 확립을 통해 전시 비상대비체계 확립에 기여
계			90	
가점			0	
합계			90	

3.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7등급

□ 주요성과

o **(규제혁신 과제 추진)** 투자·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지원, 민생안정 등을 위해 발굴한 14*건의 방통위 규제혁신과제 추진 지원

* 단말기 유통법 규제개선, 연계정보 활용 촉진,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물 편성 비율 완화 등

o **(규제비용 감축제 운영)** 폐지·완화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총 47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비용분석검증 완료, 편익 적립)

* 지역MBC(20→14%)·지역민방(3.2→2.6%) 의무편성비율 2년간('24.7.~'26.6.) 완화

o **(규제심사 지원)**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신규 위촉 시 방송·통신, 경영, 경제, 첨단기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신산업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심사 기반 마련

- 자체규제심사위를 적극 운영하여 안건의 논의·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규제 합리화 노력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위원장 탄핵으로 위원회 의결을 할 수 없어 규제개선 추진이 불가하여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다만, 행정법무담당관실은 각 국 소관의 규제개선 과제를 관리하고 규제심사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 실질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맡고 있지 않음에도 성과지표를 '규제정비 달성률'로 설정한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과지표 목표 설정 시 규제혁신 지원부서로서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변경 검토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6	10	■ 국조실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분석하여 기관의 규제혁신 방향을 적절히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4		■ 규제정비과제 이행률은 방통위의 규제개선 성과를 포괄할 수 있고, 기관 대내외적으로 규제개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임 ■ 규제혁신 업무의 고유한 기능을 강화한 성과지표 검토 필요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3	20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 적절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규제샌드박스 운영, 일몰규제 정비 시 전문가,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개선 추진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3		■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 적극 추진, 외부기관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및 개선을 통한 방송통신 국민불편 적극 해소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	16	33	■ 의견수렴, 전문가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등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지표 목표 달성 부족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7		■ 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고,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제개선 추진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4	14	■ 규제특례 형태로 허용되었던 서비스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를 추진하였고, 국민 편익증진, 탄소배출 절감 등 정책적 효과 발생 ■ 방송·통신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 완화
계			77	
가점			0	
합계			77	

4.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5등급

□ 주요성과

o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 OTT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연구반 운영·사업자 간담회 참여 등을 통한 발전적·미래지향적 미디어 통합법제(안) 마련 추진

o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콘텐츠산업 융합발전위원회에 참여하여 분산된 미디어 정책에 대한 범부처 논의 진행 및 국내 미디어 시장 규제혁신·산업성장을 위한「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발표('24.3월)

o **(방송역사 100년 기념사업 추진)** 관련 정책연구과제 진행을 통한 전문가 연구반 운영 및 관련 사례조사 실시 등 추진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과제 이행을 위해 정책연구반 운영 및 범부처 논의체 참여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법안 추진의 경우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불가 등 사유로 절차 진행이 어려운 상황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위원회 구성 지연 등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 정책방향 결정 및 입법절차 진행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나,

- 정책·법안 검토 등 실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여 지연사유 해소 즉시 입법절차 재추진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6	11	■ 관련 국내·외 연구자료 및 해외 사례 등을 충실히 조사·분석하여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5		■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과제 이행 충실도를 객관·실질적으로 판단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3	21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참여 및 정책연구반 운영,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의견을 수렴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OTT의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참여 및 통합법제 마련 추진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7	34	■ 목표치보다 상향하여 성과지표 목표달성 ■ '제도개선 추진'보다는 개선을 통해 나타나는 실질적 효과를 제시할 필요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7		■ 통합법제 마련 등은 다양한 의견 및 이해관계가 있는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5	15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에 따라 미디어 시장의 산업발전 계기가 되었으며, 통합법제 마련 등으로 미디어 정책의 적시성·합리성 제고를 기대
계			81	
가점			1	■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수행
합계			82	

5.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4등급

□ 주요성과

o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공직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맞춤형 교육 훈련을 통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 인재개발플랫폼 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국정철학·국정과제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정책 대응 역량향상 및 정책성과 창출
- 자기주도 학습지원을 위한 독서통신 운영,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코칭 및 신규자 공직 매력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방문 등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규 직원 등 조직 적응 지원

o **(연가사용 활성화)** 개인별 연가·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유도하되 권장연가일수를 15일로 지정하여 연가활용과 연가저축(보상) 간 개인의 선택 기회 확대 제공
- 유연근무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직원의 개인 상황을 반영, 출·퇴근 환경을 자유롭게 구성하여 업무 효율성 극대화
- 계절별 여행주간과 연계시킨 하계·동계휴가 장려 및 매월 간부급 연가계획 수립 등을 통한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환기

o **(공공구매 법정 의무 구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공사, 용역 등에 대해 중소기업 및 장애인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을 통한 연가사용 활성화 지속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7	13	■ 직원 대상으로 한 연가 및 유연근무제, 직원초청행사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보완함으로써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6		■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 초청행사 만족도를 신규지표로 수립, 경직된 공직사회의 직원 사기 진작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2	■ 성과관리계획상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 내부직원, 노사협력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들을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이 보임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직원 세대 구성, 새로운 기술 등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한 노력이 인정됨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8	34	■ 1개 지표(99.3%)를 제외한 모든 성과목표를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6		■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는 최근 3년간 목표치 평균보다 높은 수치로 적극적으로 목표설정 ■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7	17	■ 행정환경 및 기술변화에 대응한 직무교육 지원을 통해 '일 잘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에 기여 ■ 근무혁신 추진방안을 통해 공직문화 변화를 도모함
계			86	
가점			1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			87	

6.	공직기강 확립 철저	6등급

□ 주요성과

o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적극행정 조직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선정을 위한 자체 경진대회 개최

-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 6건에 대해 시상·홍보 등을 실시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 도모

o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포상)** 적극행정을 수행한 직원·부서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실적에 대해 기관장 상장, 포상휴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구성원들의 자발적 적극행정 수행 동기 부여

o **(보안감사 실시)** 19개 비밀취급 특례기관의 비밀취급 관리실태, 국가보안시설 보안체계 및 대응역량 실태 등 보안감사 실시

- 보안업무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보안취약점을 적발·지적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 등 후속조치

o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대비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 및 이행

-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실시 등 기반시설 보호계획에 따른 과제 이행을 통해 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제고

□ 미흡 원인분석 결과

o 관리과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 부족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관리과제명 및 성과지표 보완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7	12	■ 정책성과를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연간 과제별 이행계획 수립 적절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5		■ 주요업무 성격 및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재검토할 필요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4	21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추진일정을 차질없이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3		■ 정보통신기반시설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4		■ 적극행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등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20)	17	33	■ 대부분 목표치를 정상 달성하였으며, 목표한 대로 업무를 충실히 수행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6		■ 보안 및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성과지표 설정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4	14	■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시키고,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적극적·안정적 업무수행 환경 조성에 기여
계			80	
가점			0	
합계			80	

7.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3등급

□ 주요성과

o **(대언론·대국민 소통 활성화)** ‘2024년 정책홍보 계획’ 마련을 통해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실시, 외신보도 등 추진

- **보도자료** : 전환지원금,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결합판매 과장광고 제재 등 국민 불편 개선 및 부담 경감 정책 집중 홍보
- **브리핑** : 단통법 폐지, 스팸 종합대책 등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해 별도 브리핑을 실시하여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
- **외신보도** : 애플, 구글, 텔레그램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규제 관련 영문 보도자료를 작성·게시하여 방통위 정책을 국외로 확산

o **(정책 현장소통 강화)** 정책현장 방문, 수혜자·관계기관·이해관계자 간담회, 언론 소통 등을 통해 추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및 협조 요청

- **이해관계자 소통** : 통신사·제조사 간담회, 국내 OTT사 간담회, 통신정책 현장방문 등 사업자 의견수렴 및 협력 방안 논의
- **전문가·관계기관 소통** : AI 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방통위-과기부 정책협의회,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 등 협력체계 강화
- **언론소통** : 단통법·인앱결제·방통위 운영 관련 방송·언론사 인터뷰, 플랫폼 자율규제 및 AI 이용자 보호 관련 기고 등 주요 추진정책 적극 설명

o **(적극적 리스크 관리)** 방통위 정책·현안 관련 오보는 신속히 정정 요청하고 주요 이슈는 선제적으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

- **오보·설명자료·입장문** : 문체부 ‘정책여론시스템’ 등록사항 모니터링, 오보·왜곡보도 관련 자체 대응 / 주요 이슈 관련 보도설명자료 배포 / 방통위 관련 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 배포 등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24년도 방통위 정책홍보 만족도 조사 결과가 금년도 목표치에 미달, 다양한 홍보방안 마련을 통한 대국민 홍보 적극 추진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8	14	■ 과년도 정책홍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2024 정책홍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충실히 계획을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6		■ 정량 지표(홍보계획 배포, 오보 대응률)와 정성지표(만족도)를 포괄하는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홍보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계획에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사업자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 언론·국민의견 수렴, 전문가-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단말기유통법 폐지, 불법스팸 방지 대책 등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전광판, 지하철 광고, 쇼츠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확산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	17	34	■ 기관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의 영향으로 정성지표인 정책홍보 만족도는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나, 정량지표(주간홍보계획 배포, 오보 대응)는 목표치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7		■ 정책 확산과 오보 대응은 신속·정확성을 요구하고, 규제기관 추진 정책은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9	19	■ 통신부담 경감, 스팸 대책 마련, 이용자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보도자료 배포, 정책현장 방문, 인터뷰·기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확산
계			91	
가점			1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2	

8.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2등급

□ 주요성과

o **협업콘텐츠 확대를 통한 주목도와 정책이해도 제고**

- **(유명인 협업)** 유명 TV 프로그램인 MBN의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 개그맨 이승윤, 양궁 국가대표 선수 김우진과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제고

- **(이해관계자와의 협업)** 유관기관, 정책수혜자, 국민정책기자단, 청년인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참신한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고 정책 현장을 사실감 있게 보여주어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 제고

o **다양한 형식 발굴을 통한 콘텐츠 다양성 및 확산력 제고**

- **(콘텐츠 발굴)** 타겟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거나 누구나 알고 있는 동화를 정책과 연결하여 각색하는 등 국민들에게 정책의 이해도와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제작

- **(다양한 매체 확산)** 전국 주요거리 전광판 광고, 범부처 매체협업, 지하철광고, TV광고, 온라인 배너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 강화

o **선제적이고 시의성 있는 콘텐츠로 정책 확산 지원**

- **(상황에 맞춘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설명자료, 브리핑 영상, 행사 생중계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현안이나 변화하는 행정 여건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 맞춘 유연한 콘텐츠 제작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8	14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국민 인터넷 이용조사, 관심 분야, 미디어 소비 현황을 분석하여 계획 수립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6		■ 국민참여 콘텐츠 제작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국민 시각에서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현장 참여 등 콘텐츠 제작 독려 ■ 유튜브·인스타그램의 구독자 수와 도달률 등 정량적지표를 성과지표로 병행설정하여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성과지표 설정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4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4		■ 정책수혜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으며 청년인턴, 국민정책기자단과의 협업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발굴·제작 ■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전광판, TV 광고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메시지 확산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보도자료, 설명자료, 브리핑 영상, 행사 생중계 등 정확한 정보를 담아 다양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시의성 있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도 제고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	18	36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8		■ 경쟁이 심화되는 SNS 환경속에서도 유튜브 구독자 10% 증가, 인스타그램 팔로워 100%, 도달률 500% 증가한 적극적인 목표 설정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8	18	■ 댓글 이벤트 등을 통해 2.3천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게시하거나 정책에 참여 ■ 댓글 문의 등에 빠르게 답변하여 불편함을 해소하고 매체를 확산하여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향상
계			92	
가점			2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 평가결과 후속이행 및 개선
합계			94	

9.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1등급

□ 주요성과

o **(국제협력 강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방송통신 기업·기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방송통신 분야 정책 및 규제 이슈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

* (정부 간 협력) 미국, EU,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모로코 등
** (민간 협력) 해외 방송사, 주요 ICT 기업 및 국제행사 참석 국내 기업과의 간담회 등

o **(국제기구·다자회의 협력)** 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AIBD) 협력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다자포럼 등 참석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 선도

* 한-AIBD 공동워크숍을 주관하여 '취약그룹 미디어 접근성 증진' 논의('24.9)

o **(통상 대응)** 한-영 FTA 개선협상,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한-태국·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주요 통상협상 참석 및 대응

o **(공동제작 협정 및 제작지원)** 한-캐나다 방송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공동제작 제작비 지원* 및 공동제작 홍보 추진

* 베트남, 폴란드, 영국 등의 방송사와 국내 지역·중소방송사의 공동제작을 지원하여 3편 제작

- 국가 간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고, K-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24.9)

o **(남북 교류 협력)**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국제 콘퍼런스 개최('24.11) 및 TV프로그램 제작지원*, 실태 조사 진행

* TV 부문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MBC 안중근 다시 평화를 외치다, '24.11방영)

□ 개선보완 필요사항

o 국제협력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성과지표 중 '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조사 대상에 외국인(행사 참가자 등)도 포함시킬 필요

o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성과지표 2개(방송통신 국제협력 만족도 50%, 남북 교류정책 만족도 50%)의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

□ 평가지표별 점검 및 조치계획

평가지표(만점)		자체 평가		평정근거 및 제언
		점수	소계	
계획수립 적절성 (15점)	1. 계획수립의 충실성(8)	8	14	■ 방송통신 규제기관 조사 및 주요정책 이슈 분석을 바탕으로 국외협력 계획 수립 ■ 방송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지원 및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사전조사 및 심층조사 진행
	2. 성과지표의 적절성(7)	6		■ 사업수혜자인 방송사업자 및 학계 등을 대상으로 국제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도 조사 ■ 남북 관련 3개 사업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각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통합 성과지표 마련
시행과정 적절성 (25점)	3. 추진일정의 충실성(5)	5	25	■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
	4.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관계부처·부서간 협업 노력도(15)	15		■ 방송사 등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국·내외 박람회 참석 ■ AIBD 공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아태지역 미디어 기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 후 정책에 반영 ■ 한-캐나다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위해 해외 및 국내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업 추진
	5.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5)	5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개국 정부와의 양자면담, 국제행사 참여, 기업면담 등을 통해 글로벌 이슈 대응에 총력
성과 달성도 (40점)	6.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20)	18	36	■ 방송통신 국제협력만족도, 남북방송통신 교류정책 만족도 등 성과목표를 적절히 달성
	7. 성과지표의 적극성(20)	18		■ 국제협력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등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전년 실적치 대비 상향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 최근 남북간 경색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하게 도전적으로 설정
정책 효과성 (20점)	8.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20)	19	19	■ 정부기관 등과의 면담 및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방송통신 교류를 확대, 글로벌 현안에 적기 대응 ■ 국제 콘퍼런스 개최 및 공동제작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방송콘텐츠 해외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 ■ 통일의식 제고 및 남북 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계			94	
가점			1	■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
합계			95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 정책부서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5. 지상파 방송의 공정책무 강화	o 방통위 위원회 미구성으로 인해 부득이 재허가가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방통위 주도의 적극적 성과창출 노력이 다소 부진	o 위원회 구성 후 차질없는 재허가 진행 및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의 콘텐츠 제작지원 등 추진('25년)
6. 종편·보도 채널 등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o 방통위 위원회 미구성으로 의결이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나, 성과지표 달성률이 현저히 낮음 o 성과지표가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적극적인 지표 설정이 필요	o 위원회 구성 시 지연안건 처리 추진('25년) - '25~'2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 채널 인정 - ㈜신안유선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 의결 및 과기정통부 통보 o 성과지표 개선 추진('25.상)
9.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o 방송평가 제도개선 실적 관련, 전년도 대비 개선된 실적이 미흡 -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을 반영한 적극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o 위원회 구성 시 방송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평가규칙' 개정 추진('25년)
10.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o 방송광고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 노력이 미흡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방통위 주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	o 방송사업자·시청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지속적 의견수렴 실시('25년) o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 개정 추진(계속)
12. 통신분쟁 조정 신속성 제고 및 온라인상 피해구제 지원 강화	o 추진업무 내용이 단편적, 성과목표 달성의 적극성 부족 - '통신분쟁 해결률'보다는 실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적 대안 고민 필요	o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이용자 분쟁을 해결하고 실질적 체감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검토, 분쟁조정위 신속성 제고, 조정제도 접근성 및 피해예방 활동 강화 등 추진 - 성과지표(통신분쟁 해결률) 개선·검토('25.상) - 통신분쟁조정위 상임위원 위촉·운영('25.하) - 조정사례집('25.상), 신청 매뉴얼 발간('25.하) - 유관기관 간담회 등 협력 강화('25.하)
17. 부가통신 시장 이용자 권익 증진	o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및 성과지표 개선 검토 필요	o 성과지표 개발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예정('25.상)
18. 방송시장 공정경쟁 촉진	o 성과지표가 소극적·방어적이고, 업무의 주요내용과 연관성이 부족 - 성과목표를 업무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	o 이용자 이익 증진·보호 관련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검토하여 개선 예정('25.상)

□ 지원부서

관리과제 번호	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1. 원활한 정책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o 성과지표를 '과정지표'로 설정하여 성과(효과성)가 불분명 - 기획업무 고유 기능을 강조할 필요,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o 성과지표 달성을 통해 기획업무 고유 기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표 설정 시 검토('25.상)
3.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o 위원회 미구성 등 외부원인에 따른 측면이 있으나, 성과지표 달성 미흡 - 지표개발을 세분화할 필요 o 규제혁신 업무의 고유한 기능강화 필요	o 성과지표 목표 설정 시 규제혁신의 지속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변경 검토('25.상)
4.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 설계	o 지표달성을 위해 노력한 측면이 있으나 결과 성과가 미흡 - '제도개선 추진'보다는 개선을 통해 나타나는 실질적 효과(결과)를 제시할 필요	o 위원회 구성 지연 등 방통위 전체회의 개최가 어려워 정책방향 결정 및 입법절차 진행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나, - 정책·법안 검토 등 실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여 지연사유시 입법절차 재추진('25년)
6. 공직기강 확립 철저	o 과제명을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성과지표를 대표성 있게 재설정 할 필요가 있음 ※ 부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 과제명과 지표 설정 필요	o 업무성격과 연계되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검토 및 개발('25.상)

[붙임] 2024 전략목표 성과분석 보고서

1. 기관 개요 및 핵심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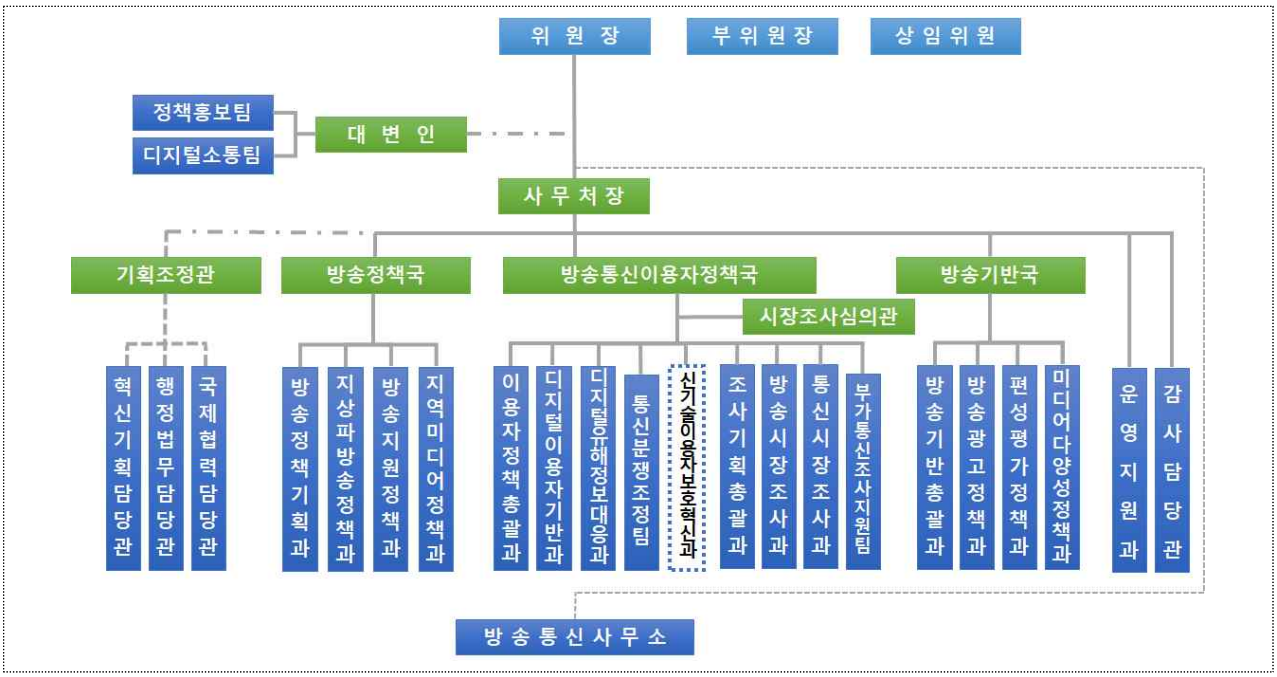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핵심기능

혁신 성장 기반 조성	❶ 미디어 혁신과 지속성장 기반 구축 ❷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 ❸ 방송·통신·미디어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❶ 방송·통신·미디어 신뢰성 제고 ❷ 방송미디어 공공성·공익성 제고 ❸ 공영방송 공적책임·공공성 강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❶ 차별없는 미디어 접근권 확대 ❷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❸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대응 강화

□ 조직도



2. 전략적 목표체계

임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

	전략 I.	전략 II.	전략 III.	전략 IV.
전략목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복지를 제고한다.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성과목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3.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전략목표1.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성과지표 |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

□ 성과지표 개요

〈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건수** 〉

- **개념 :** 방송법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와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조항 위반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를 합산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조사대상 :** 지상파, 종편·보도PP
- **조사방법 :** 2024년 지상파, 종편·보도PP를 대상으로 한 방송법 또는 방송심의 규정 위반 제재 내역 중 공정성 관련 제재 내역을 조사
- **측정산식 :**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방송법 제4조제2항, 3항, 4항)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 + 방송 공정성 위반[(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에 따른 방송심의 재제 건수

□ '24년 측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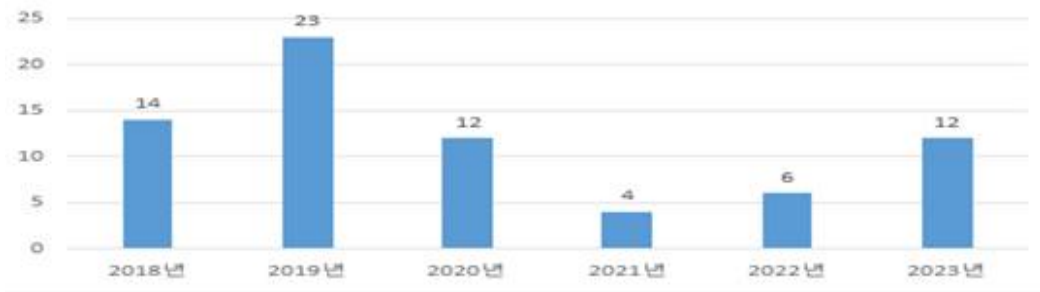
○ 2024년 방송심의 규정 제재 내역 중 중 '방송의 공정성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12건

*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

- 방송법 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관련 위반사항은 없음

- 지상파 12건, 종편·보도PP 0건으로 '23년 6건에 비해 6건 증가

<공정성 관련 심의제재 건수(단위 : 건)>



□ 성과분석

○ ’19년, ’20년은 방송의 공정성 위반 건수가 증가했으나, ’21년 대폭 감소하여 ’24년 현재 감소세를 유지 중인 것으로 분석됨

※ ’19년 14건, ’20년 23건, ’21년 12건, ’22년 4건, ’23년 6건, ’24년 12건

< 방송의 공정성 관련 매체별 심의제재 현황 >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지상파	종편	보도
주의	5	2	-	7	12	-	7	2	-	3	1	-	5	-	-	7	-	-
경고	1	-	1	1	1	-	3			-	-	-	-	-	-	3	-	-
관계자징계	2	-	1	2	-	-	-	-	-	-	-	-	1	-	-	2	-	-
과징금	2	-			-	-	-	-	-	-	-	-	-	-	-	-	-	-
소계	10	2	2	10	13	-	10	2	-	3	1	-	6	-	-	12	-	-
총계	14			23			12			4			6			12		

※ 방송 공정성 위반[(방송심의규정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14조(객관성)]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처분일 기준)

※ 재심청구, 소송 등이 진행 중으로 확정되지 않은 처분은 미포함

○ 특히, 종편·보도PP의 경우 ’19년 4건에 불과했던 공정성 제재 건수가 ’20년 13건으로 늘어나 방송사 구성원들의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 ’21년 이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준수 노력을 통해 공정성 관련 심의 제재건수가 대폭 감소(‘20년 13건 => ’24년 0건)

< 방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통위 추진 내역 >

■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입법 논의 지원

■ **방송의 공정성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과 및 이행점검**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방송의 공정성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방송사업자에 부과하고, 매년 해당 조건에 대한 방송사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이행하도록 독려

< 지상파방송사 대상 방송의 공정성 관련 재허가 조건 부과 예시 >

① 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을 위한 세부방안 제출 및 이행
②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제도를 강화하여 운영 등
③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 및 이행
④ 방통위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제작비 산정·지급 등) 준수 및 이행실적 제출
⑤ 방송법 및 심의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심의제도 개선 계획 제출 및 이행

< 종편·보도PP 대상 방송의 공정성 관련 재승인 조건 부과 예시 >

①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재승인 신청서 상 사업계획 준수(종편PP 3사)
② 오보·막말 등 방송심의 관련 법정제재 매년 5건(선거별 2건) 이하 유지(종편PP 4사)
③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위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교육 강화(종편·보도PP 3사)
④ 시사·보도프로그램 공적책임·공정성 관련 외부기관 진단(종편·보도PP 5사)

-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실현계획' 이행여부 실태점검의 일환으로, KBS, MBC, JTBC 등 지상파, 종편·보도PP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23.9~10)을 추진하여, 계획 미준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부과 또는 행정지도를 실시('23.11)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

■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 운영 정착**

- '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방송사 내 기구인 '편성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17.12)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

- 특히, KBS 및 MBC는 방통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통해 보도·편성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 그 외 방송사의 경우에도 편성위원회 구성에 있어 자체 제정한 편성규약에 따라 사측과 종사자 측을 동수로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해당 기구가 취지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하고 있음

< '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부과한 편성위원회 운영 관련 재허가 조건 >

①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KBS · MBC · 지역MBC)

② **편성위원회 또는 편성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기구**를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구성·운영**(MBC · 대전MBC)

< KBS·MBC 편성규약 개정 주요내용 >

■ **KBS**('19.10.22. 의결·'19.11.1 시행)

① 단체협약 실효 시 전체 편성위원회 지속 가능방안 마련 등

■ **MBC**('18.6월 개정)

① 회사·종사자 각 5인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

② 편성위원회 개최 규정 개선(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양측 합의하에 미개최 가능,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회의 개최)

③ 회의 결과를 사보와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공지

④ 편성위원회를 편성규약에 규정하여 단체협약과 분리(단체협약 실효시 편성위원회 지속 가능방안 마련)

⑤ 편성위원회를 통해 이견이 조정되지 않는 경우, 시청자위원회를 통한 자문 근거 마련

< 주요 방송사별 편성위원회 운영 현황('19~'24)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KBS	9	7	3	2	4	2
MBC	2	2	3	2	3	1
SBS	1	2	1	2	2	1
TV조선	4	4	4	4	4	4
채널A	8	8	8	8	8	8
JTBC	4	4	4	4	4	4
MBN	4	4	6	6	6	4
연합뉴스TV	7	8	4	3	4	1
YTN	7	4	9	3	2	3

< 주요 방송사별 편성위원회 구성 현황 >

방송사명	편성위원회 구성 현황('24.12월 기준)
KBS	총 10인(사측 5인, 실무자측 5인)
MBC	총 10인(사측 5인, 실무자측 5인)
SBS	총 6인(사측 3인, 실무자측 3인)
TV조선	총 12인(사측 6인, 실무자측 6인)
JTBC	총 8인(사측 4인, 실무자측 4인)
채널A	총 8인(사측 4인, 실무자측 4인)
MBN	총 8인(사측 4인, 실무자측 4인)
연합뉴스TV	총 8인(사측 4인, 실무자측 4인)
YTN	총 10인(사측 5인, 실무자측 5인)

□ 향후 추진계획

ㅇ 성과지표의 향후 5년간(2025년 ~ 2029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자료출처)
	'24	'25	'26	'27	'28	'29			
방송사업자 공정성 관련 제재 건수(건)	12	17	15	15	15	12	최근 5년 실적치의 평균값과 성과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여건 등을 고려	방송법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 위반[1]에 따른 제재 건수+방송 공정성 위반[2]에 따른 방송심의 제재 건수 1) 방송법 제4조제2,3,4항 2) 방송심의 규정 제9조(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내지 제3,5항, 제14조(객관성) 위반	방송사업자 제재 현황

* '25년 목표치는 최근 5년간('20~'24년) 실적치의 평균(11.4)을 고려하되, 탄핵정국 등 국내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성 제재건수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감안(+5)하여 목표치를 설정

- 그 외 '26년~'28년은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이 개최됨을 감안(+3), 기타년도('29년도)는 최근 5년 실적치의 평균(11.4)과 유사하게 12건으로 설정

ㅇ 전략목표 성과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추진

-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 및 국회 논의 지원

나.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점검을 통한 공정성 제고

- 지상파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공정성 보장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 제고 유도

< 주요내용 >

■ 지상파방송사('24년 12개사, '25년 8개사) 재허가 실시

- '24.12월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상파방송사업자(12개방송사 146개방송국) 대상으로 재허가 추진('25.상반기 예정)

※ 재허가 지연 상황에 대하여 방송사 공문 안내 조치 완료('24.12.30.), 위원회 구성 후 추진 예정

- '25.12월말 허가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지상파방송사업자(8개 방송사 10개 방송국) 대상으로 재허가 추진('25.하반기 예정)

-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종편PP 재승인 심사 추진

- '25.11월말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PP(1개사)를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 추진('25.하반기 예정)

※ 종편PP 유효기간 : JTBC('25.11.30.)

-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점검 실시('25.5 ~ 11월)

- **(지상파방송 부과 조건)**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지상파 UHD 정책방안 준수,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 및 취재보도 윤리 위반 방지 등

■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실시 ('25.2 ~ 11월)

- **(종편PP 부과 조건)**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준수, 공정성 준수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건수 5건(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은 2건) 이하 유지, 전문 외부기관에 의한 공정성 진단 실시

- **(보도PP 부과 조건)**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한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 및 교육 강화, 전문 외부기관에 의한 공정성 진단 실시

전략목표2.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성과지표 | 통신 · 인터넷시장 제재건수

□ 성과지표 개요

〈 통신·인터넷시장 제재 건수 〉

- **개념 :** 통신·인터넷 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통한 이용자 보호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조사대상 :** 전기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 **조사방법 :**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 **측정산식 :**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유통법, 위치정보법상 제재건수 집계

□ '24년 측정결과

○ 2024년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총 4건의 제재 처분

※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으로 금지행위 위반 관련 미처분

< 제재처분 주요내용 >

의결일	대상	위반법령	제재사유	제재내역
'24.2.23.	트위치	전기통신사업법	VOD 서비스 중단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o 시정명령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o 과징금 13.09억원 부과
'24.5.14.	7개사 (`22년 정기 실태점검)	위치정보법	소재지 변경 신고 의무 위반 폐업신고 의무 위반	o 과태료 총 975만원 부과 (7개사)
'24.5.22.	SKT, KT, LGU+, SKB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o 시정명령 - 금지행위중지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o 과징금 총 14.71억원 부과 (4개사)
'24.6.12.	188개사 (`22년 정기 실태점검)	위치정보법	이용약관 및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등 위치정보법 위반	o 시정명령(14개사,) o 과태료 총 3.45억원 부과 (156개사) o 과징금 총 8.56억원 부과 (52개사)

□ 성과분석

<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

○ **(단말기유통법 폐지)**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및 국민 단말기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법 폐지를 추진하고, 국회 입법논의를 지원

< 제5차 생활규제개혁 민생토론회 >

o 민생토론회('24.1.22, 국무조정실 주관)를 통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추진 발표

o 대통령 지시사항('24.1.22.)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되,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o 공동소관부처(과기정통부) 및 유관부처(국무조정실, 법제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생토론회 과제 후속조치 추진(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24.4.2. 등)

- 정부·여당 협의안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24.2.29.)」발의 지원

※ 21대 국회 회기 만료 폐기에 따라, 22대 국회에「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률안」및「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재발의,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대표 발의, '24.6.3.)

<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법안(박충권 의원안, 6.3.) 주요내용 >

o (기본방향) 지원금 공시 의무 등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하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존속이 필요한 조항은「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① 사업자 경쟁제한		② 이용자 권익 보호		③ 단말기 유통시장 건전화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공시 의무	+	▲지원금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25% 선택약정할인) ▲단말기비용-이통서비스요금 구분고지 등	+	▲판매점 사전 승낙제 (이통사→대리점→판매점) ▲불공정 유도행위 금지 등
폐 지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 여·야 의원실 방문설명, 국회 토론회 참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

< 국회 입법논의 지원 노력 >

o 국회 방문 및 단말기유통법 폐지안 관련 설명
※ 여당 정책위 의장, 과방위 여·야 간사, 과방위 법안소위 위원, 법사위 위원 등

o 폐지안 관련 상임위 법안소위 참석(9.3., 11.21.) 및 전체회의 참석(7.16., 11.26.)

o 여야 정책토론회 참석 및 정부 입장 설명
※ 홍석준 의원 주최 세미나(2.7.), 김현·이훈기 의원 주최 토론회(8.22.), 박충권 의원 주최 토론회(9.12.) 등

-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률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24.12.26.)

○ **(전환지원금 도입)** 법 폐지 이전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24.3.8. 시행) 및 고시 제정(3.14. 시행)으로 전환지원금* 도입

* 통신사를 변경하는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5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한 지원금



< TV 뉴스보도(연합뉴스 TV, 3.13.) >


보도자료

전환지원금 통해
단말기 구입 부담 확 낮춘다 !

•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전환지원금 지급
•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를 매일 변경 가능하도록 자율성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13일(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보도자료 배포(3.13.) >



< 인스타그램 SNS 홍보(3.14.) >

< 전환지원금 도입과 이용자 혜택 주요내용 >

○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 실시로 인한 번호이동 증가를 고려하여 시행 전, 모든 가입 유형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시지원금을 10만원 내외 확대*

* 주요 요금제(월7~8만원) 기준 최대 10만원 증가, 최고요금제(월12~13만원) 기준 최대 11.1만원 증가

○ 방송통신위원장과 이통사·제조사 대표 간담회(3.22.)을 통해 협조 요청, 이통3사는 전환지원금 금액을 상향하고 지원기종을 확대

구 분	이통 3사 (SKT, KT, LGU+)
최초시행(3.16)	**단말기 4~6종, 3~13만원**
	↓
확대(3.23)	**단말기 7~10종, 5~33만원**

○ 이통3사는 '24.11월 기준 단말기 10여 종에 대해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1~35만원 수준의 전환지원금 지급 중

< 전기통신사업법상 제재처분 >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조사)** 개인방송 플랫폼사업자 **트위치**의 화질저하 및 VOD 중단 관련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안) 송부('24.2.6.)

-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원 부과 위원회 심의·의결('24.2.23.)

○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조사)** 방송통신결합상품 서비스 판매시 허위·과장·기만광고*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이용자이익 저해 행위 관련 통신 4사(KT,SKT,SKB,LGU+) 대상 시정조치('24.5.22. 위원회 의결)

*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0원' 등으로 광고, 약관내 요금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 혜택으로 광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누락, 축소, 은폐하는 광고 등

-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통신4사, 총 14.71억원) 등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명령 이행점검 등 후속조치 수행(~'24.11월)

< 위치정보법상 제재처분 >

○ **(상시점검체계 구축)** '22년도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라 개인·사물 위치정보사업자는 매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격년으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 실시(연중)

- 위치정보법상 이용약관 및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의무, 상호 및 소재지 변경신고 의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등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52개사, 약 8억5천6백만원) 및 과태료(163개사, 총 3억5천5백만원), 시정명령(14개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부과

□ 향후 추진계획

○ **성과지표의 향후 5년간(2025년 ~ 2029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자료출처)
	'24	'25	'26	'27	'28	'29			
통신·인터넷시장 제재건수(건)	4	6	7	7	8	8	과거실적(평균치)·추세 및 '24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9년 목표를 8건으로 설정 ※ '22년 8건, '23년 10건, '24년 4건	연간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법상 제재건수 집계	심결서

○ **전략목표 성과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 전기통신사업법·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시성 있는 점검·조사로 시장 안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성 제고

-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상시 조사·제재를 통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

전략목표3.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성과지표 |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 성과지표 개요

〈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

- **개념 :** 연도별 방송사업 시장 규모 추이를 분석하여 방송시장 공정환경 조성 등 정책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 측정
- **조사기관 :**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사대상 :**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사,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PTV 콘텐츠사업자 등 423개('23년 기준)
- **조사방법 :**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
- **측정산식 :** '23년도 지상파 방송·지상파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 '24년 측정결과

o '24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방송매출액 합계는 18조 9,575억 원으로 전년대비 8,004억 원(△4.1%) 감소하여, 역성장을 기록

-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3조 7,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4,261억 원(△10.2%) 감소, 매출 점유율 또한 전년대비 1.4%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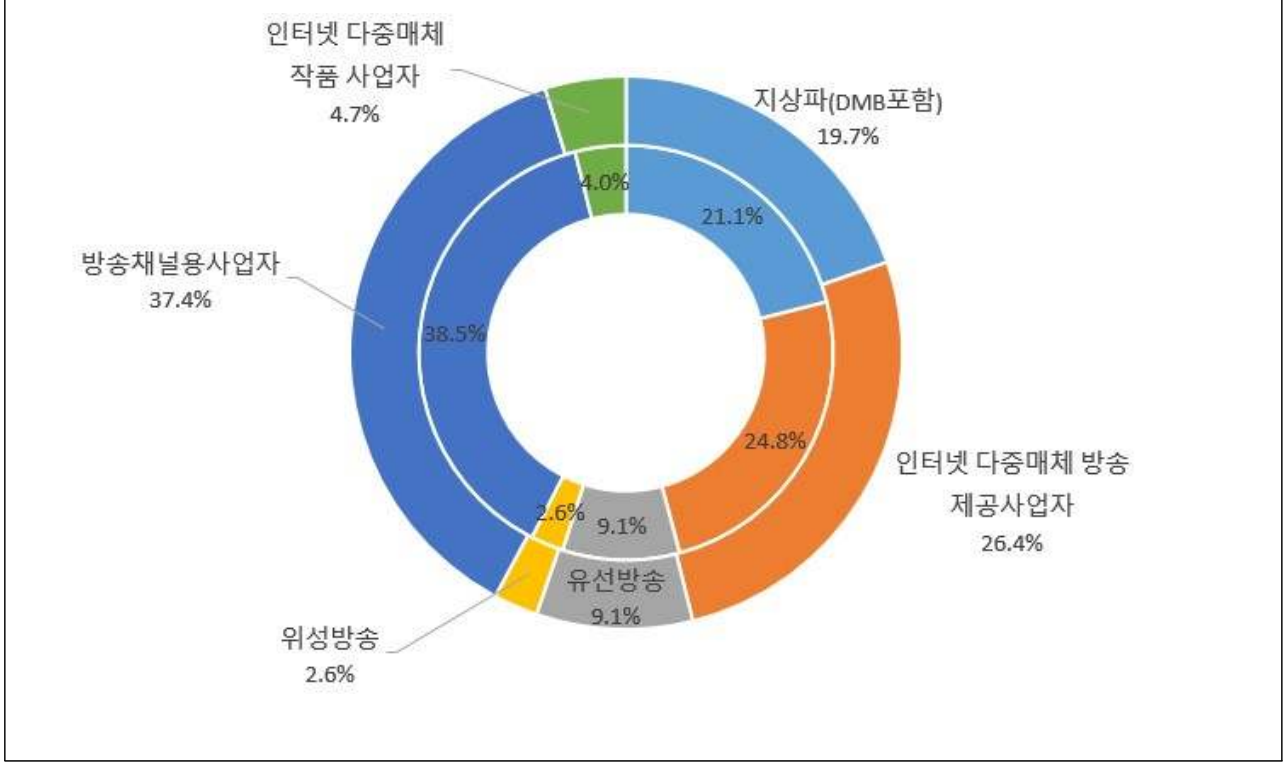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7조 924억 원으로 전년대비 5,172억 원(△6.8%) 감소, 매출 점유율 또한 전년대비 1.1%p 감소함

-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또한 각각 전년대비 703억 원(△3.9%), 139억 원(△2.7%) 감소하였으나, 매출 점유율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 방송산업 매출액 추이(단위: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증감	증감률
지상파(DMB포함)	3조 9,931억 (20.6%)	4조 1,601억 (21.1%)	3조 7,340억 (19.7%)	△4,261억	△10.2%
인터넷 다중매체 방송 제공사업자	4조 6,368억 (23.9%)	4조 8,945억 (24.8%)	5조 72억 (26.4%)	1,127억	+2.3%
유선방송 (종합유선+중계유선)	1조 8,547억 (9.6%)	1억 8,041억 (9.1%)	1조 7,338억 (9.1%)	△703억	△3.9%
위성방송	5,210억 (2.7%)	5,059억 (2.6%)	4,920억 (2.6%)	△139억	△2.7%
방송채널용사업자	7조 5,520억 (38.9%)	7조 6,096억 (38.5%)	7조 924억 (37.4%)	△5,172억	△6.8%
인터넷 다중매체 작품 사업자	8,440억 (4.4%)	7,837억 (4.0%)	8,980억 (4.7%)	1,143억	+14.6%
합계	**19조 4,016억**	**19조 7,579억**	**18조 9,575억**	**△8,004억**	**△4.1%**

< 방송산업 매출액 점유율 추이(`22~`23년) >



□ 성과분석

o **(방송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편성규제 개선)** 장르간 혼합, 유통 경로 다원화 등 미디어 환경에 맞춘 주요 편성규제의 폐지·완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 방송편성 규제 개선안 주요내용 >

편성규제	현 행	개선 내용	비고
오락 프로그램	종합편성 중 오락 프로그램 상한비율 규정 (매반기 60% 이하)	**폐지**(KBS 제외)	법 개정사항
1개국 수입물	전체 수입물 중 1개국 수입물 상한비율 규정 (연간 90% 이하)	**폐지**	
순수 외주제작	순수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정 (방송사별 매반기 16~35% (중앙지상파·종편PP))	**단계적 하향** 검토 (중장기)	고시 개정사항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정 (매반기 10%)	**폐지**	법 개정사항
지역방송	지역방송에 대해 순수외주제작 의무비율 규정 (지역MBC 20%, 지역민방 3.2%)	**적용 제외**	

-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관계자군별 의견청취(4월·7월, 총 7회), 방송유관기관장 간담회(4.26.), 문체부 협의(3월·5월) 등 실시

o **(한시적 편성규제 완화)** 경영상황이 어려운 지역방송사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자체제작을 촉진하고자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한시 완화* 우선 시행('24.7.3.)

* 지역MBC(20→14%), 지역민방(3.2→2.6%)의 의무편성비율 2년간('24.7.~'26.6.) 완화

o **(네거티브 규제체계 도입)**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및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을 위해 열거된 유형의 방송광고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 추진 노력

- 이해관계자(한국방송학회, 시민단체 등, '24.3~4월, 5회)와 관련 부처(문체부, 식약처) 의견수렴('24.5~10월, 4회) 및 정책연구('24.6월~)를 통해 시청자 보호방안을 포함하는 방송법령 개정(안) 마련 추진

< 광고유형 간소화 세부내용 >

	프로그램 외					프로그램 내	
현행 <한정적 열거>	프로그램 광고	토막 광고	자막 광고	시보 광고	중간 광고	가상 광고	간접 광고

개선 <범주화>	프로그램 외 광고	프로그램 내 광고
	기타 광고 : 프로그램 내/외 분류가 어려운 방송광고	

□ 향후 추진계획

o 성과지표의 향후 5년간(2025년 ~ 2029년) 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4	`25	`26	`27	'28	`29			
방송사업자 방송사업 매출액 (조원)	19.0	19.3	20.0	20.3	20.7	21.0	'21~'24년 실적(과년도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의 연평균 증가율(1.7%)을 고려	과년도 지상파 방송·지상파DMB·유선방송·위성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 의 방송사업 매출액 합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o 전략목표 성과제고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

- **(방송광고 제도개선)**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하여 방송광고 매출액 증대에 기여

- **(방송편성 규제 제도개선)** 현 미디어 환경에 맞춘 합리적인 편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함으로써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및 프로그램 판매 등 매출 증대에 기여